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20-01

정책보고서 2018-72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최현수 · 천미경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2장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 9

제3장 한국 사회의 진단 : 지속가능성의 위기 ····· 17

제1절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 19

제2절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 22

제3절 위기의 근원 :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 25

제4장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성찰 ····· 27

제1절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 : 최소주의 사회정책 ····· 29

제2절 사회부문의 낙후 :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 31

제3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과제 ····· 34

제5장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 35

제1절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포용과 혁신 ····· 37

제2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 39

제3절 사회발전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 41

제6장 사회정책비전 1 : 사회통합 강화 ····· 47

제1절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49

제2절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53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58

제7장 사회정책비전 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61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63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69

제3절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 75

제8장 사회정책비전 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 79

제1절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 81

제2절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88

제3절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93

제9장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 99

참고문헌 ····· 105

그림 목차

[그림 2-1] 한국 사회정책의 주요 궤적(1961-2018) ··· 13
[그림 2-2]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변화 추이(1960-2015) : 교육비 지출 제외 ··· 14
[그림 2-3] 사회정책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비율 : 교육비 지출 포함 ··· 15
[그림 3-1]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 19
[그림 3-2] 노후, 의료, 교육 등 생활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 24
[그림 3-3] 불평등의 순환 구조 ··· 25
[그림 3-4] 현 한국사회 사회정책의 재분배효과 ··· 26
[그림 4-1]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 30
[그림 4-2]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 ··· 31
[그림 4-3]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 비교(OECD, 2017) ··· 33
[그림 4-4]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임무 ··· 34
[그림 5-1]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 ··· 38
[그림 5-2]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 · 9대 전략 ··· 39
[그림 5-3]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 40
[그림 5-4]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정책 ··· 41
[그림 5-5] OECD 국가의 인구규모와 경제개방도(2017) ··· 42
[그림 5-6]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 43
[그림 5-7] 경제·금융·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협력 관계 ··· 45
[그림 6-1]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구성과 진단 ··· 49
[그림 6-2]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가입비율과 보장수준 ··· 50
[그림 6-3]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및 국민연금 수급자(1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 분포 52
[그림 7-1] 인구 1천명 당 교육·보건복지 취업자 수(2017) ··· 69
[그림 7-2] 2016-2026, 취업자 증가 예상위 5대 업종 ··· 70
[그림 7-3] 돌봄 분야 근로 실태 비교 ··· 70
[그림 7-4] 일상 생활에서 미세먼지 노출 비율 ··· 75
[그림 7-5] 2006년 한국사회 사고 총량 ··· 75
[그림 8-1]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다양성 부족 실태(PISA, 2012) ··· 81
[그림 8-2] 주요 국가별 가계 소비지출 대비 문화여가지출 비중(2016) ··· 82
[그림 8-3] OECD 국가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2014) ··· 83

[그림 8-4]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 88
[그림 8-5] 평생학습 참여양상 ····· 89
[그림 8-6] 평상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 89
[그림 8-7] 일터에서의 재량 및 직무만족도, 유리천장 지수 ····· 91
[그림 8-8] 국가 총인적자원의 질 및 관리체계 혁신 방향 ····· 92
[그림 8-9] 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실직 후 빈곤율(실직 후 3분기 후) ····· 95
[그림 8-1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 96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전략과 연계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제시

□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영역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에서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7가지 국정과제(16~22)를 제시하고 있음

○ 포용적 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혁신 성장을 현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추진 중임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한편, 사회정책 영역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국정과제(42~47)를 제시하고 있음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 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 · 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지원 강화와 주거부담 완화와 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예방 중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함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이 같은 국정목표와 국정전략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9월 6일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회의에서 발표된『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임[1)]

○ 특히,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관련 구조적, 미시적 원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기 요인을 개선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1) 김연명(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철균(한꾹교육개발원), 연수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공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정완(건강보험정책연구원), 진미윤(LH토지주택연구원),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이 참여 하였음

○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주요 연구내용을 도출하여 수행함

□ (연구주제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배경 및 필요성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원인 검토

□ (연구주제 2) 역대 정부 사회정책 추진전략 및 한계,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 및 혁신 성장과 사회정책 추진 전략의 연계성

□ (연구주제 3)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민의 생활영역별 사회정책의 역할 및 사회경제적 효과

□ (연구주제 4)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연구주제 5)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생활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수립방향 설정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주제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배경 및 필요성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원인 검토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거시적·구조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검토하여 사회정책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도출

○ 거시적 차원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경제구조의 다양한 원인과 더불어, 미시적 차원에서 국민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부담과 위기 상황에 대한 검토

□ (연구주제 2) 역대 정부 사회정책 추진전략 및 한계,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 및 혁신 성장과 사회정책 추진 전략의 연계성

○ 역대 정부(보수정부 vs. 민주정부)에서 추진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우선 순위 및 정책 패러다임 비교 및 한계와 원인 도출

○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전략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전략의 연계성 검토

□ (연구주제 3)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민의 생활영역별 사회정책의 역할 및 사회경제적 효과

○ 사회정책 영역을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주거복지, 고용 및 일자리, 교육 및 문화, 환경 및 안전, 성 평등 정책, 기술혁신 및 인적자본 혁신, 사회혁신 등으로 구분함

○ 각 정책 영역별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존 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

□ (연구주제 4)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사회통합, 지속가능성 제고, 인적자본 혁신,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포용과 혁신의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설정

○ 사회정책 영역별 세부 추진전략 및 정책 사례 제시

□ (연구주제 5)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생활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수립방향 설정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생활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수립방향 및 계획 검토

□ 목차 및 연구내용 구성

1장 연구개요

2장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3장 한국 사회의 진단 : 지속가능성의 위기
- o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 o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 o 위기의 근원 :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4장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
- o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 : 최소주의 사회정책
- o 사회부문의 낙후 :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 o 문재인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과제

5장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 o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포용과 혁신
- o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 o 사회발전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6장 사회정책비전1 : 사회통합 강화
- o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o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o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7장 사회정책비전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o 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o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o 일상 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8장 사회정책비전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 o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 o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o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9장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현 정부 및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패러다임 관련 기존 선행연구 문헌조사 및 검토

○ 사회정책 분야별 사회경제적 효과 관련 실증분석 연구 문헌조사 및 검토

□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 사회정책 전략 추진 필요성 및 방향 관련 실증자료 분석을 통한 지표 산출 및 활용

□ 자문회의를 통한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 전략 추진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및 원인 검토

○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 및 혁신 성장과 사회정책 추진 전략 연계방향 검토

○ 포용과 혁신을 위한 생활영역별 사회정책의 역할과 효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검토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생활 최저 및 적정기준 수립방향 설정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정책 체감 만족도 제고

□ 향후 사회정책 전략회의 운영을 위한 연구로서 사회정책 추진전략 및 의제 발굴 등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

제 2 장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2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1. 사회정책의 발전과정

□ 역대 정부의 대표적 복지관련 국정비전 (남찬섭, 2018)

○ 민주정부 :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사회비전 2030(노무현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문재인 정부)

○ 보수정부 : 능동적 복지(이명박 정부), 한국형 복지국가, 맞춤형 복지(박근혜 정부)

□ 복지비전과 관련된 역대 정부의 키워드

○ 각 정부별 복지비전의 키워드

- 김대중 정부(생산적 복지)
  - 경제위기극복, 사회통합, 인권과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노동을 통한 복지 (사회투자, 노동시장변화로 인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
  -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참여형 복지체제(↔국가중심의 복지체제)
  - 지역공동체 중심의 분권적 복지체제(중앙집권형 복지체제)
  - 공정한 시장, 국가에 의한 재분배, 취약계층의 자활, 삶의 질 향상, 조세정의, 참여와 협력
- 노무현 정부(사회비전 2030)
  - 동반성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삶의 질 향상, 세계화
  - 협치, 참여와 자치, 분권과 자율
  - 인적자원 육성과 개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동전의 양면, 일을 통한 성취, 사람을 소중히 여

기는 사회

- 이명박 정부(능동적 복지)
  -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촘촘한 사회안전망, 빈곤대물림 차단, 양성평등, 소외계층 보호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을 통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 박근혜 정부(한국형 복지국가, 맞춤형 복지)
  - 세계화, 정보화, 인구고령화, 후기산업사회, 소득양극화
  - 기회의 평등, 경제활동에의 활성적 참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접근, 예방적 생활보장국가, 사회투자형 생활보장국가, 다층적 사회보장 안전망(기본생활보장, 범주적 생활보장)
- 문재인 정부(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책임성 강화, 삶의 질 향상
  - 노동존중, 성 평등, 차별 없는 공정사회, 지식정보사회, 국민의 행복, 국민통합, 인간존엄성 유지

□ 역대 정부의 복지비전과 관련하여 각 정부에서 정책영역별로 도입했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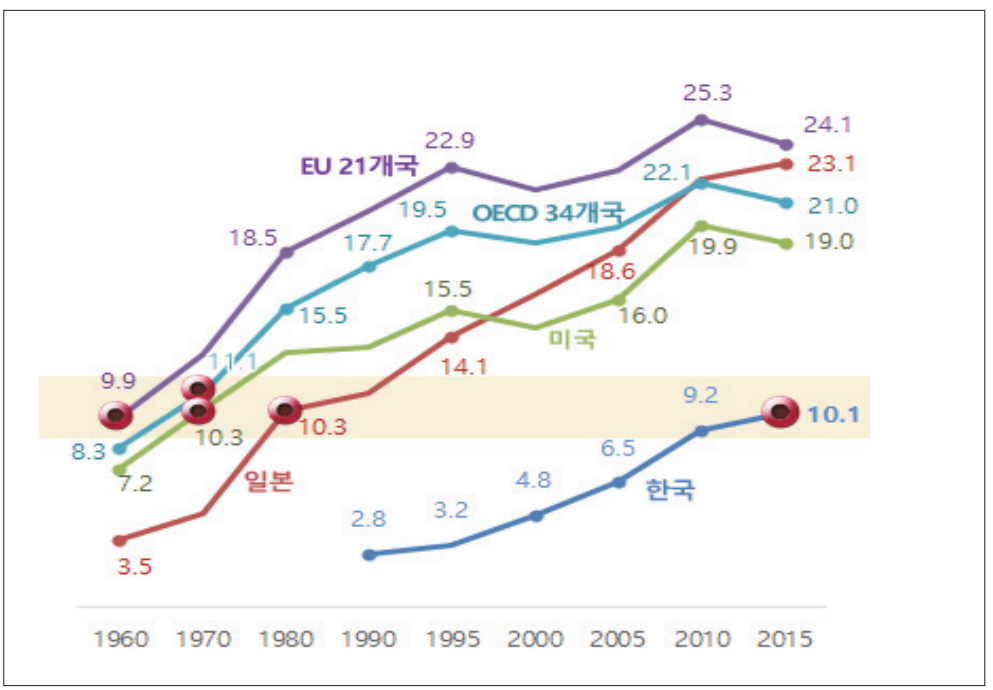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 사회정책의 주요 궤적(1961-2018)

2. 사회정책의 성과와 현 주소 : 복지국가 '초기 단계' 진입

□ 사회정책의 꾸준한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사회지출이 GDP 10% 수준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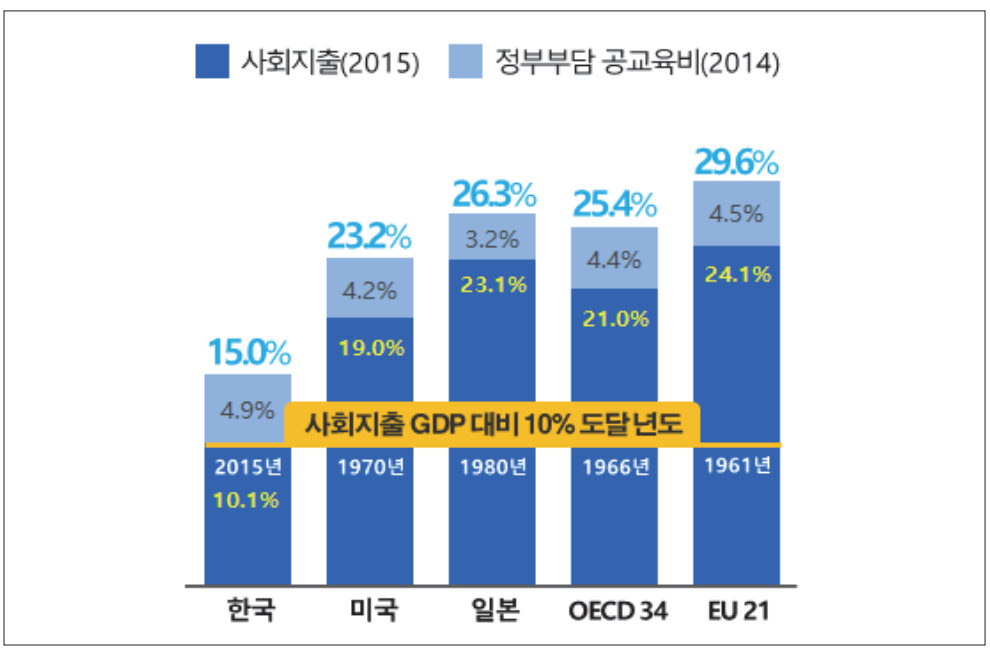
□ 이는 유럽 선진국가들이 1960~70년대에 도달한 수준으로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2〕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변화 추이(1960-2015) : 교육비 지출 제외



□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공교육비를 포함하더라도 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관련 총 사회지출의 비중은 15.0%로 OECD 평균 25.4%에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임

〔그림 2-3〕 사회정책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비율 : 교육비 지출 포함



제 3 장 한국 사회의 진단 : 지속가능성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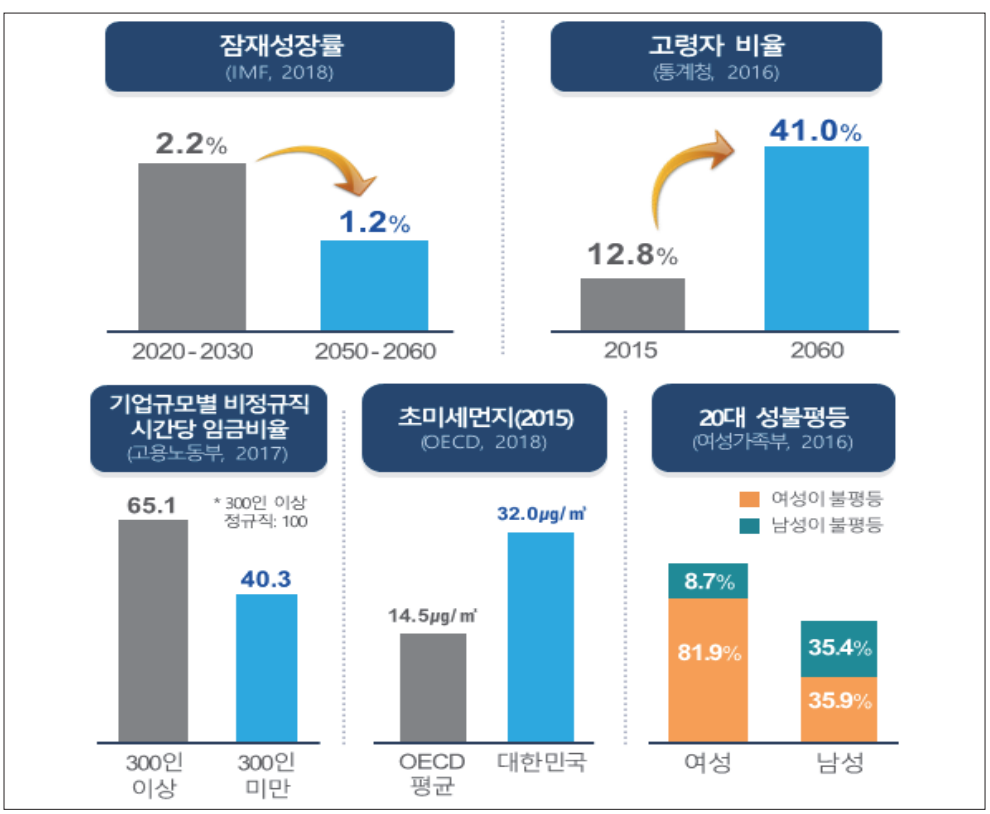
제1절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제2절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제3절 위기의 근원 :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3 한국 사회의 진단 : 지속가능성의 위기

제1절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 우리사회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착화된 위기와 더불어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

〔그림 3-1〕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 고착화된 위기

○ 저성장의 고착화와 재원조달 능력 하락

○ 고령자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및 복지비용 증가

○ 노동시장 양극화와 격차 심화 및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

□ 새로운 도전

○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의 국민적 민감도 증가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준 : 의료비용, 노동생산성, 농업생산량 등)
  - 전 세계 : 연간 GDP의 1% (0.3%, 2015년)
  - 한국 : 연간 GDP의 0.63% (약 35조원, OECD 최대)
  - 중국(2.63%) 〉 한국(0.63%) 〉 일본(0.42%) 〉 미국(0.21%) 〉 EU 주요 4개국(0.11%)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인구 100만명 당)
- 전 세계 : 600만~900만명 (300만명, 2010년)
- 한국 : 인구 100만명 당 1109명 (359명, 2010년)
  - 한국(1109명) 〉 일본(779명) 〉 미국(307명) 〉 EU 주요 4개국(340명) 〉 캐나다(300명)

○ 4차 산업혁명과 고용불안의 확산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및 기술혁신으로 인한 배제 확대
  - “AI나 로봇은 기술 소유주를 위해 일하고 돈을 번다는 점이 중요” Richard B. Freeman (Prof, Harvard Univ.)
-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비정형 노동 증가 및 불평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필요
  - 독일 Arbeiten 4.0 ☞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의 미래 논의, 노사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2년의 논의를 거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표 개발

○ 친밀성과 돌봄의 위기와 성 평등적 사회질서로의 재편 요구

-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전업주부/돌봄자'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업과 젠더 위계는 균열하고 있지만, 성평등주의가 정착하지 못하여 친밀한 관계와 돌봄의 위기 초래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의 성 평등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
- 돌봄의 위기
  -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은 더 이상 안정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고독사,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증가
  -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 사회화된 돌봄의 평가절하, 돌봄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난 문제, 안전하고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침해
- 청년층의 결혼 회피 심화
  - 결혼을 해야 한다는 미혼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특히 여성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구 비중은 31.0%로 남성 42.9%보다 낮음
  -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성별화된 의무와 책임의 제도로서 가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남성 중 41.4%가 경제적 이유, 여성 중 36.6%가 결혼으로 인한 구속과 제약) 중 하나임

제2절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 미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위기

○ 일상 생활(소비)의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부족으로 인한 가구의 사적 부담과 미래 불안 증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격차로 인한 상실감>	<미래 위험과 불안>
의료, 주거, 교육, 돌봄,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사적 부담 증가와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교육, 주거, 문화 등에서 준거집단과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상실감 증가와 삶의 만족과 행복 감소	노후소득보장, 돌봄 및 의료비 등 미래 불안 낮은 정책 신뢰와 체감 사적 준비로 인한 부담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에서의 과도한 가구 부담 및 가계 부채로 인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와 삶의 질 격차 확대

○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심리사회적 불안 심화,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노후소득보장, 돌봄 및 의료비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사교육비와 민간 보험료(실손 보험, 사적 연금 등) 부담 증가, 주택 보유 관련 가계부채 확대 등 불합리한 가계지출 구조 확대

○ 사회정책 공공성 부족 ☞ 국가복지 책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정책 체감, 복지 혜택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족, 삶의 만족과 행복 저하 ☞ 중산층 저항으로 인한 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관련 사회적 합의 제약

- 기초연금, 보육,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경험이 있는 납세 가구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높음

□ 우리 사회의 공공성 부족과 사적 시장의 과잉

○ 공공 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삶의 불안을 민간보험, 사교육, 민간 ·전 월세 등 가계부담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가 8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정착

○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문제에 과도한 사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재생산 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으로 가계는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

- 국민들은 노후, 건강, 교육, 주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대응을 시장을 통해 수행하며, 생활체계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기능이 과도하게 전가되어 있음
  - 실손 보험 가입으로 인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은 증가(전체 가구의 86.9%가 실손보험 가입 / 월평균 보험료는 28.7만원 수준(201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하는, 반면, 2017년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 10.4만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 민간 연금은 최근 금융 회사에서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함에 따라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기 어려움(2012~2016년 평균 수익률, 국민연금 5.2%, 퇴직연금3.1%, 개인연금 3.3% / 연평균 수수료율, 개인연금 1.05~1.47%, 퇴직연금 0.38~0.47%)
  -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가계의 소비 지출을 경직시키며, 공교육과 사교육간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 민간 전월세의 과도한 비중은 임차가구,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필수 소비지출(주거비)을 높임

○ 가계 자원 배분의 왜곡

- 공공 사회정책의 미흡으로 가계의 합리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복지정책 확대와도 갈등관계 형성

〔그림 3-2〕 노후, 의료, 교육 등 생활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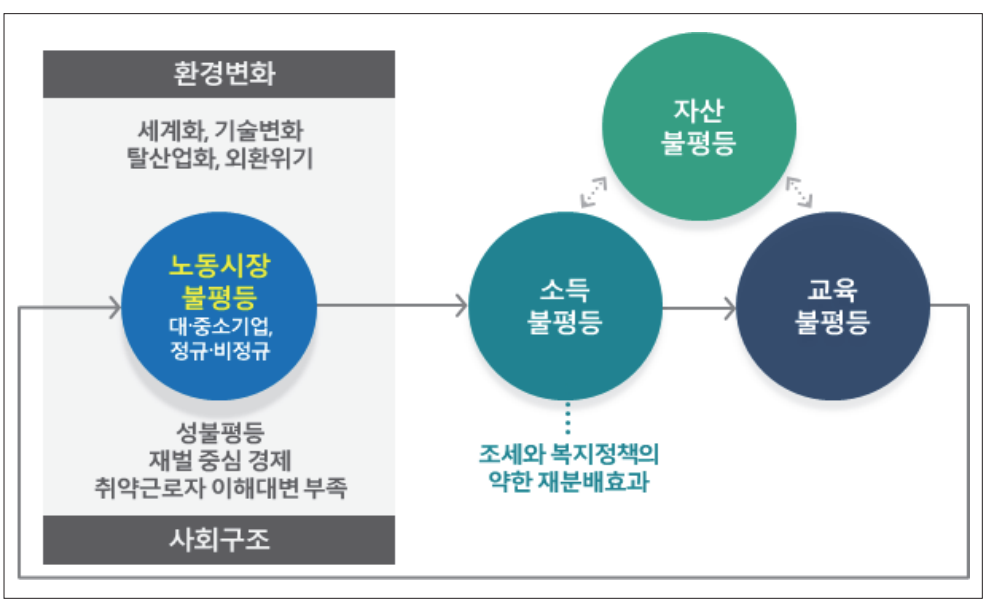
제3절 위기의 근원 :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여러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선택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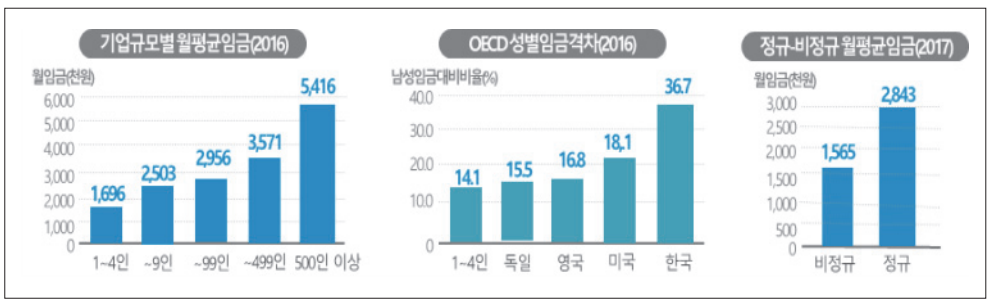
○ 세계화, 기술변화, 탈산업화, 외환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와 대기업중심 경제, 정규직 중심 노조, 여성중심 돌봄, 조직 내 유리천장 등 사회구조에 대응한 정책이 부족하였기 때문

□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가 소득, 자산,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

〔그림 3-3〕 불평등의 순환 구조



○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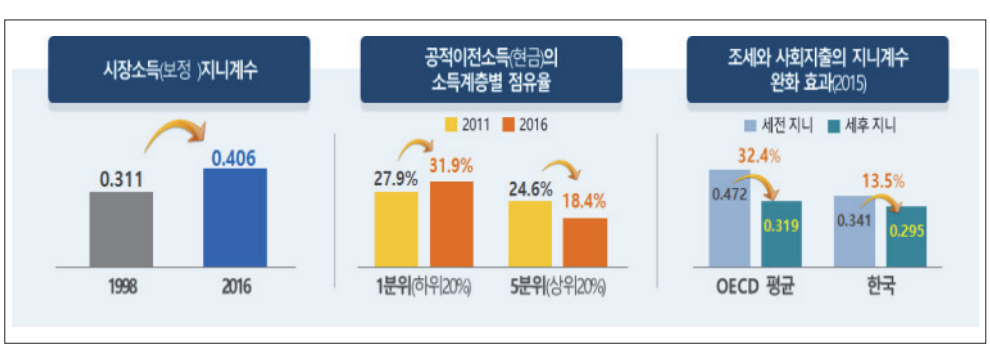


○ 다양한 불평등이 연관되어 중첩적으로 존재하며, 반복적 악순환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다가올 기술변화는 우리사회를 보다 불평등화 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층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요구됨

□ 악화되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배분되나 절대량이 작아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OECD 평균에 현저히 미달

〔그림 3-4〕 현 한국사회 사회정책의 재분배효과



제 4 장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성찰

제1절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 : 최소주의 사회정책
제2절 사회부문의 낙후 :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제3절 문재인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과제

4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

제1절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 : 최소주의 사회정책

□ 개발시대에 뿌리 내린 사회정책은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재정의 최소화와 수익자 부담, 그리고 근로 유인의 저해 방지 등으로 설계된 '최소주의 사회정책'임.

□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이 패러다임의 극복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 박정희 & 김영삼 정부(1961-1997)

- 발전국가 패러다임으로 사회정책의 역할 최소화
- 국가주의 교육투자와 교육의 시장화
- 국가재정 최소화의 보수주의 복지정책, 민간보험시장 성장 유도
- 가부장주의와 국가발전수단으로서 여성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억압적통제적 노동정책
- 공해방지 위주의 사후규제

○ 김대중 & 노무현 정부(1998-2007)

- 교육 민주화와 공공성, 공평성 강조
- 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진보적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
-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과 성주류화 전략
-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일부 진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2008-2017)

- 선택과 경쟁의 신자유주의 교육
- 보육서비스 확대 등 일부 진전에도 전반적 복지비용 억제 전략
- 성평등 실현보다는 저출산저성장 해결 수단으로서의 여성정책
- 노동 교섭력 약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가속화
- 4대강 사업 등 환경정책 후퇴

〔그림 4-1〕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제2절 사회부문의 낙후 :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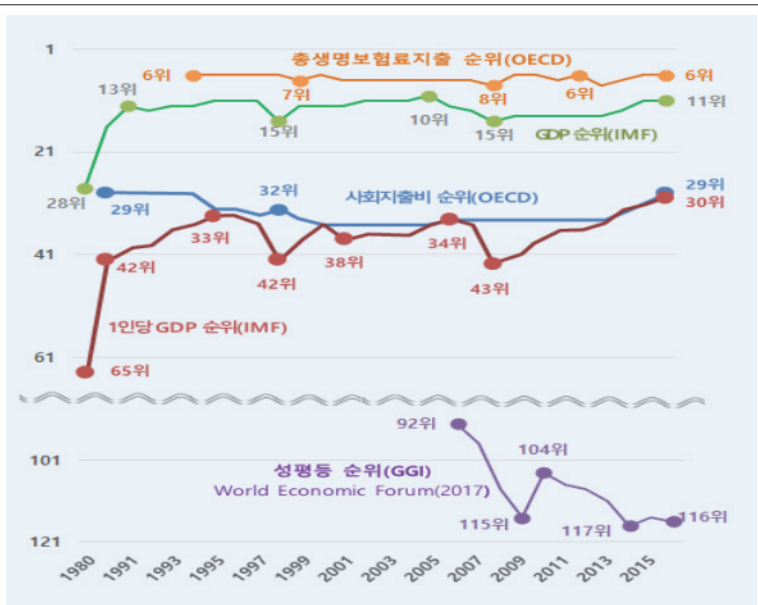
□ 1인당 GDP 등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은 뒤처져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 심화

□ 수출주도 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된 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중산층이 대거 민간보험을 통해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현상이 가속화 됨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예, 사회비전 2030) 기초생보법 제정, 보육서비스 확대, 성평등정책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 시대에 각인된 '최소주의 사회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특히 노동시장 및 성별 격차 해소, 경제수준에 맞는 공공복지 확대가 지체되었음

□ 일부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정책 관련 지표가 OECD 중하위권에 위치하여 삶의 질이 경제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상황

〔그림 4-2〕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



□ 35개국 중 삶의 질 지표 순위[2)]

○ 삶의 질 상위권 지표

- 교육 : 학생 역량(5위), 교육 성취(10위) 시민참여 : 투표 참여율(10위)

○ 삶의 질 중위권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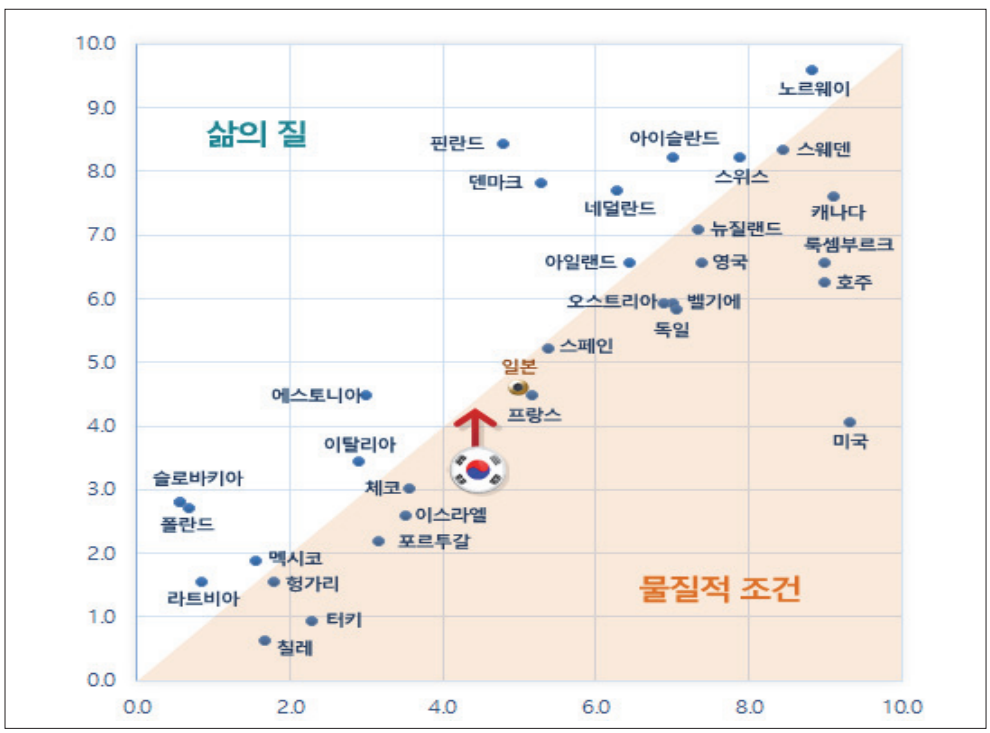
- 교육 : 기대교육기간(18위)
- 시민참여 : 규칙 제정에의 참여(13위)
- 건강 : 기대수명(11위)

○ 삶의 질 하위권 지표

- 주거 : 개인당 방수(25위)
- 직업 : 고용률(21위)
- 공동체 : 지원 관계망의 질(35위)
- 환경 : 대기오염(35위), 수질(26위)
- 건강 : 자기보고 건강상태(35위)
- 안전 : 야간보행 안전도(26위), 살인율(24위)
- 일과 삶 균형 : 장시간 근로자 비중(32위), 여가 · 돌봄 시간(24위)

2) OECD 회원국(35개국, 비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외) 중 측정지표별 한국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위권 지표의 위미는 한국순위가 1~10위에 해당하는 지표를 일컬음(중위권 지표 : 11~20위, 하위권 지표 : 21~35위). 따라서 살인율(10만 인당 피살자 수)이 하위권 지표에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 보다 살인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2018.5.27. 자료 인출)

〔그림 4-3〕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 비교(OECD, 2017)



제3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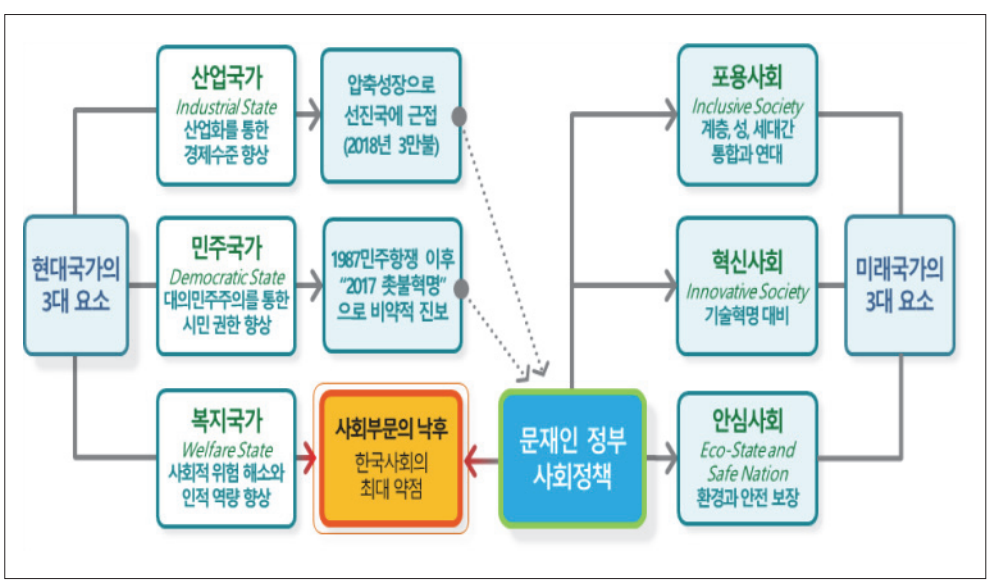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사명과 과제는 지체된 복지국가의 완성과 미래사회 대비하여 포용사회, 혁신사회,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것임

□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 민주화에 있어서 성공한 대표적 국가이나 사회정책의 낙후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

○ 현대국가의 3요소인 산업국가(경제), 민주국가(정치), 복지국가(사회) 중에서 사회정책 분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임

□ 지체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계층·성·세대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임

〔그림 4-4〕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임무



제 5 장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제1절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포용과 혁신
제2절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제3절 사회발전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5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제1절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포용과 혁신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및 사회정책의 중요성 재조명하고 있음

□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이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각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포용과 혁신을 위한 성장 및 사회정책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요 개념 및 특징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강조점을 제안하고 있음

○ World Bank / IMF ☞ 포용적 성장

-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하므로, 포용적 성장 필요
-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하고 동시에 인적자본의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부각시키고 있음

○ OECD ☞ 포용적 성장

- IMF와 마찬가지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불평등이 장기 성장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1인당 GDP 외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지표 개선을 강조(BLI(Better LIfe Index))
- 인적자본 강화, 성별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 ILO ☞ 임금주도성장

-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소득분배,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보호 최저기준' 재정립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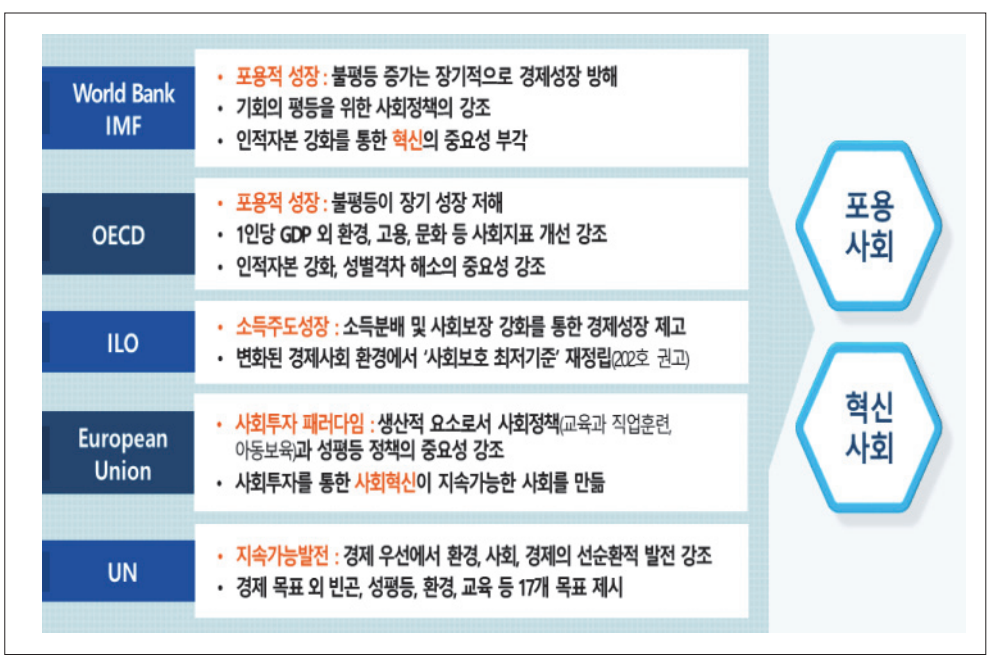
○ EU ☞ 사회투자 패러다임

- 사회투자 패러다임을 중시하며,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교육, 직업훈련, 아동보육)과 성 평등 정책의 중요성 강조
-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

○ UN ☞ SDGs

- SDGs(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여 경제 우선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선 순환적 발전 강조함
- 경제 목표 외 빈곤, 성 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

〔그림 5-1〕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



제2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1.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으로 인해 나타날 배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이러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함

〔그림 5-2〕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 · 9대 전략

○ 포용(Inclusiveness)

- 재분배 강화, 격차 완화, 계층 이동 증대는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함

○ 혁신(Innovation)

- 충실한 사회정책은 개인기업혁신, 사회제도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한 안정은 혁신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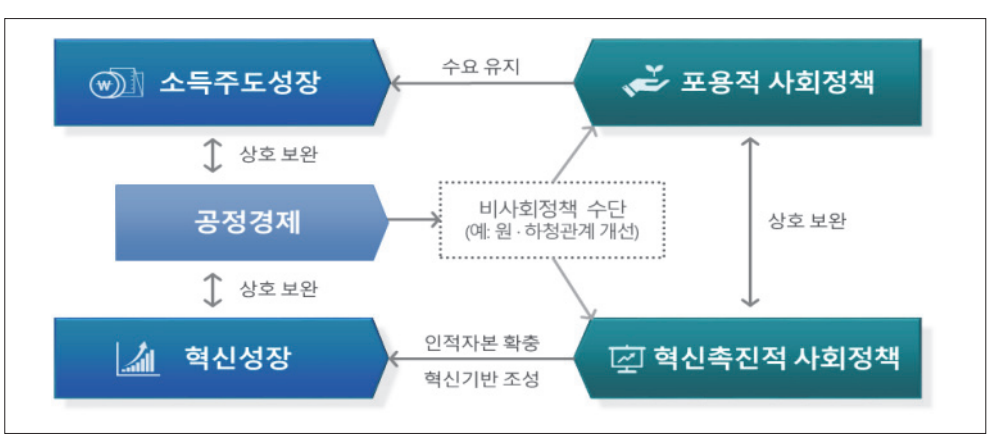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비전의 관계

□ 공적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적 사회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임

□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정책을 통한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와 사회 전반의 혁신기반 조성은 '혁신성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함

□ 공정경제 같은 '비사회정책 수단'은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정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처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임

〔그림 5-3〕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제3절 사회발전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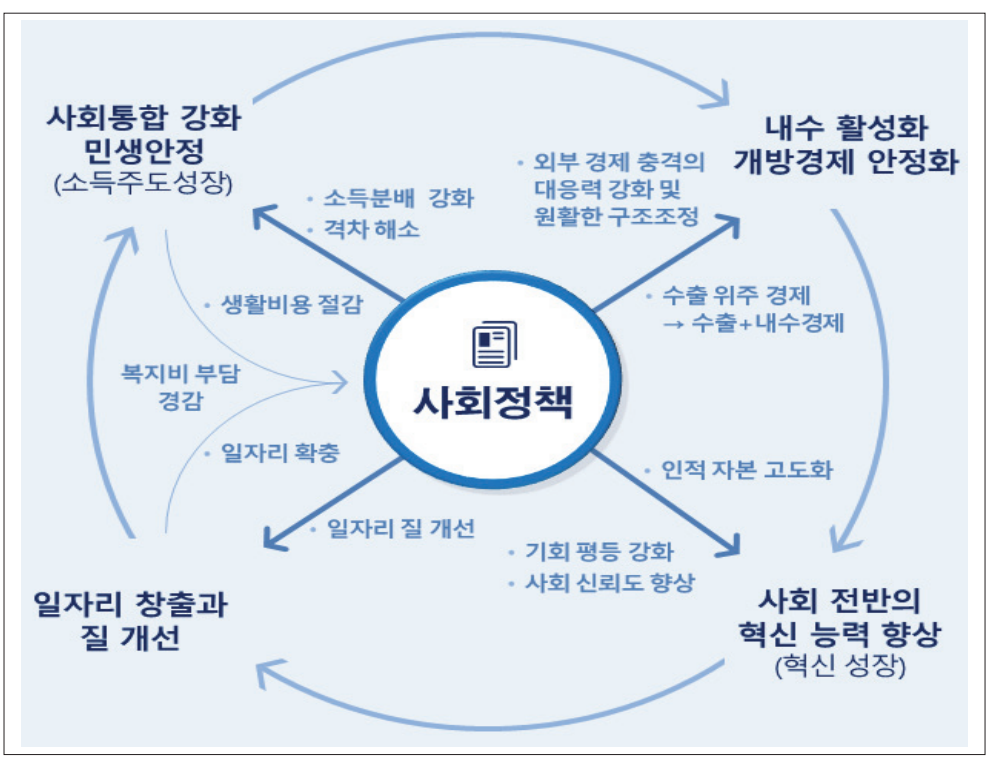
□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회정책을 성장의 방해물로 인식하여 경제사회적 순기능을 주목하지 못했음

○ 사회정책은 소득분배와 기회평등 수단을 넘어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음

○ 사회정책은 내수 촉진을 통해 수출주도 개방경제를 안정화시키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정책은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을 향상시켜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그림 5-4〕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정책



1. 개방경제와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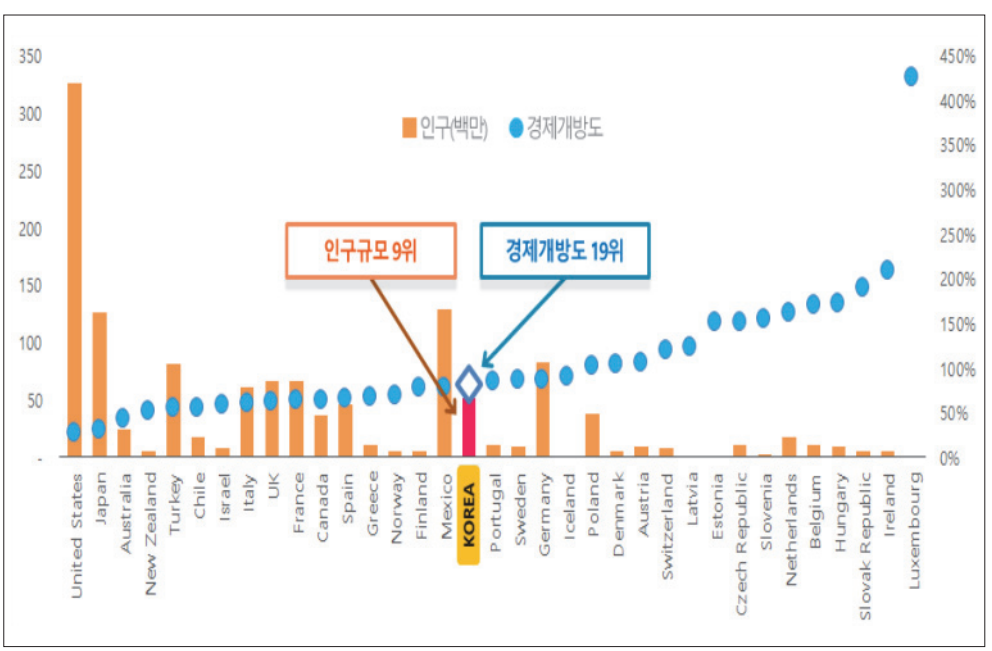
□ 한국은 인구규모에 비해 경제개방도(수출입규모)가 높고(인구 35개국 중 9위, 경제개방도 19위), 수출품목집중도도 높아(11위)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

□ 개방경제일수록 정부규모가 크고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비지출이 대외 경제 충격에 대한 경제안정화 역할을 함"(Dani Rodrik,1998)

□ 한국은 정부 규모와 사회지출 규모가 작아 대외경제적 충격(예,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제 안정화 기능과 경기변동을 완화해주는 재정과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automatic stabilizer)도 약함

□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구조조정 시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치에도 장애요인

〔그림 5-5〕 OECD 국가의 인구규모와 경제개방도(2017)



출처 : World Bank(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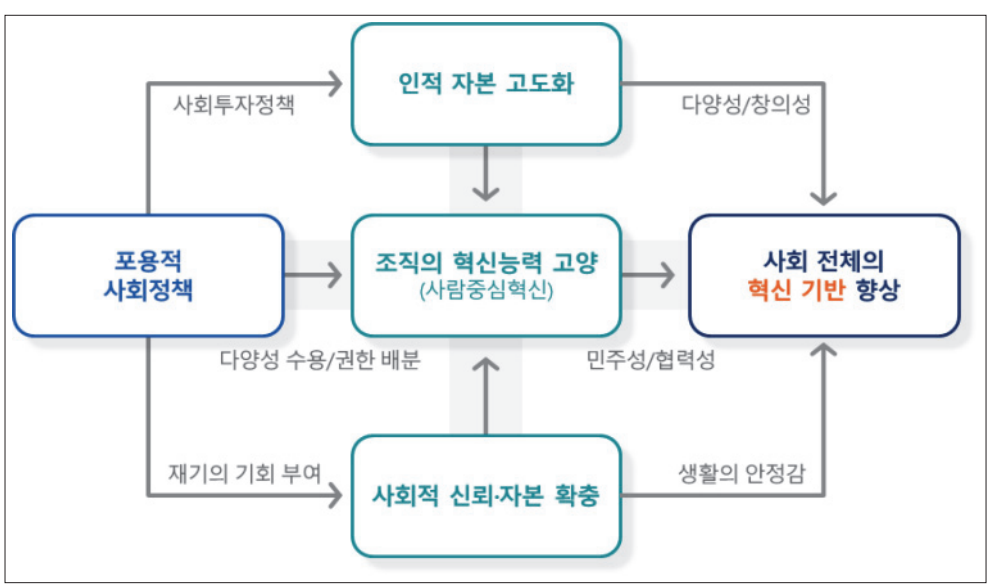
2.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관계

□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포용의 사회정책은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투자 정책의 핵심인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해 혁신의 기반을 구축함

- 이 때, 기술 중심의 노동 배제적 혁신이 아닌, 사람중심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결정이 독점되지 않고 공유되어야 함
- 포용의 사회정책과 의사결정권 참여(공유)가 없을 경우 기술이 인간의 task 중 스킬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방식의 전략이 채택됨
-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는 포용적 사회정책과 함께 사람중심 혁신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이는 다시 사람중심 성장(혁신성장,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증대로 이어짐
- 사람중심 혁신은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달성되는 혁신 친화적 사회를 기반으로 개인, 조직, 사회 세 차원 모두에서 작동하여야 함

〔그림 5-6〕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한 안정과 기회의 제공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안정을 통해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

- 각자도생의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안정감과 여유가 창조성을 자극하여 혁신을 추동할 수 있음
- 지나친 불안은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이는 생존본능만을 자극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활동에 부정적이며, 협력과 신뢰를 통한 집단 지성 활용에도 부정적
-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적 자본 강화로 이어지면 협력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혁신역량은 커지고, 사람중심 혁신이 일터를 역량중심으로 바꾸고,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3. 예방적 경제·산업정책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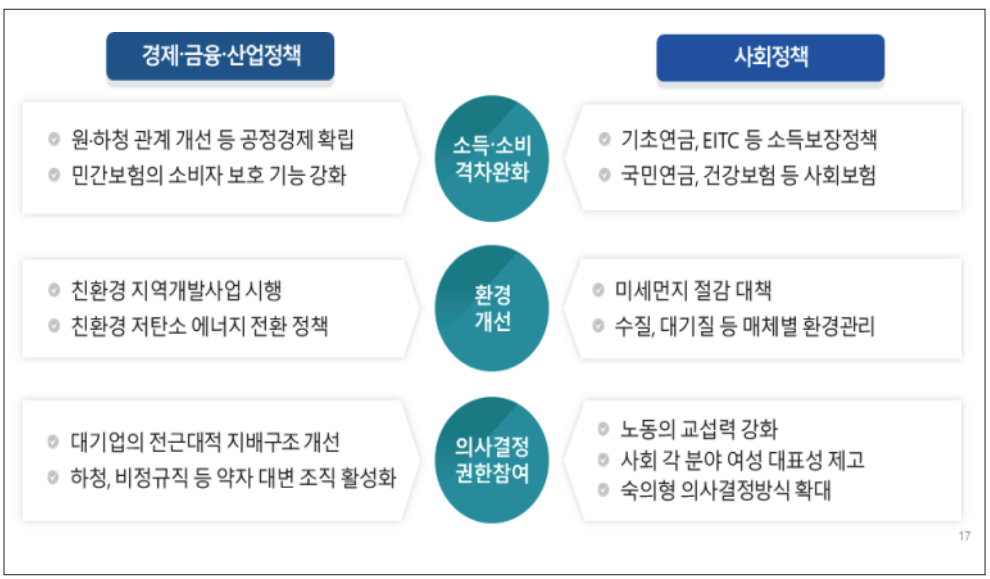
□ 경제 및 금융과 산업정책은 위험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정책 수단임

○ 비사회정책 수단은 사회정책비용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여 정부 재정의 효율성 증진

○ 경제 및 금융,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역할 배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

□ ‘비사회정책 수단’은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정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처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임

〔그림 5-7〕 경제·금융·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협력 관계



제 6 장

사회정책비전 1
: 사회통합 강화

제1절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제2절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6 사회정책비전 1 : 사회통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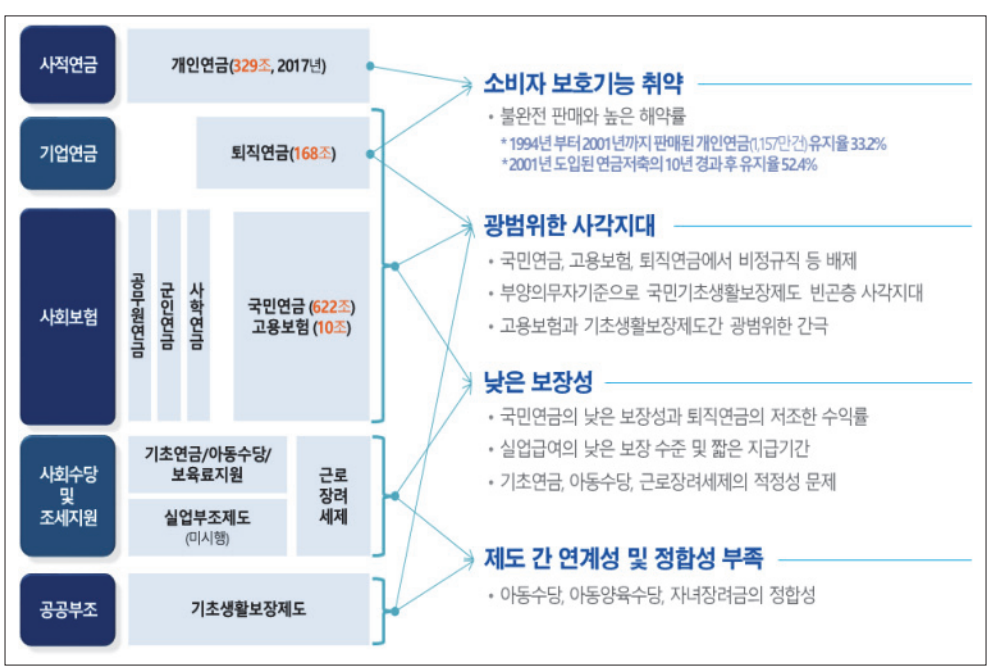
제1절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1.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여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보험이 사회통합보다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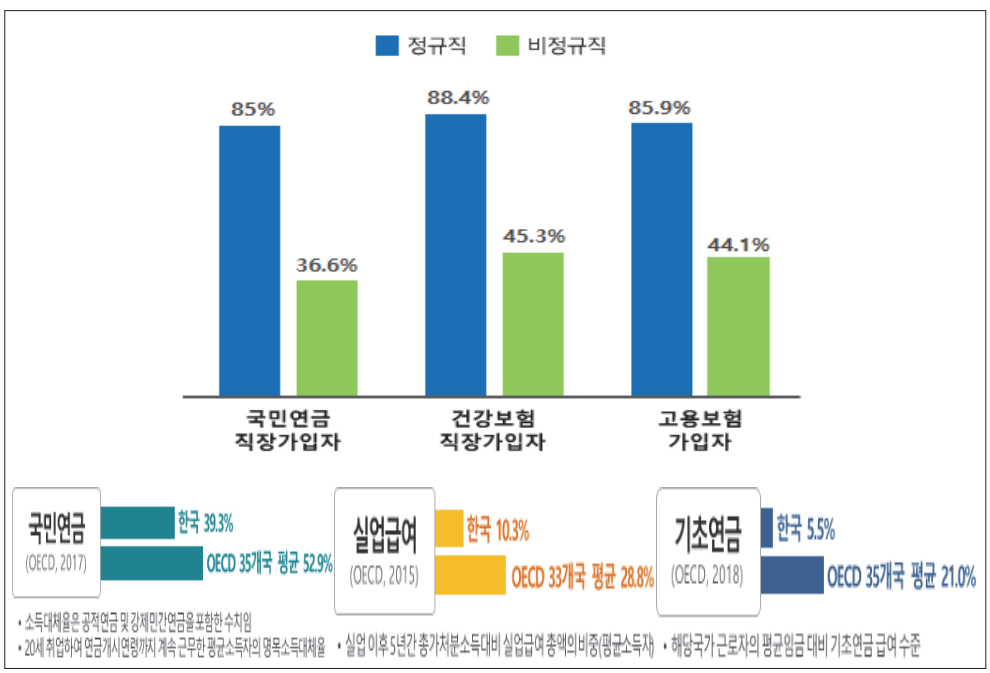
〔그림 6-1〕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구성과 진단



□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보장성이 낮아 생활보장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최근 비정형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그림 6-2]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가입비율과 보장수준



2.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

가. 사회보험 강화론

□ 근거 : ① 노후, 의료비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 불안정, ② 민간보험시장의 생활보장 기능 불안정

□ 개혁 방향 및 정책

① 공적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② 비기여방식의 수급권(예, 출산크레딧) 확대 및 노동시장 조세 행정 개혁으로 사각지대 축소

□ 개인연금·퇴직연금 개선

○ 낮은 수익률, 높은 해약률로 인한 낮은 보장성

○ 상품 및 투자정보 공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동시에 사적연금시장을 합리화할 필요

나. 기초소득보장 강화론

□ 근거 : ①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형 근로 확산으로 사회보험의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② 정규직 위주 사회보험으로 인해 계층간 격차 확대

□ 개혁 방향 및 정책

①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부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조세지원방식 현금 수당 확대

② 기초소득 보장방안 강구

□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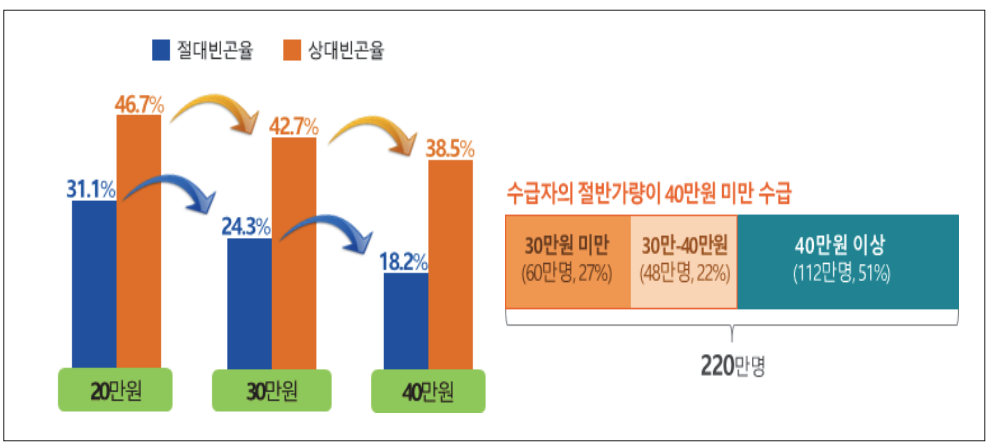
○ 기초연금 추가 인상 시 절대빈곤율은 현저히 완화되나 상대빈곤율은 크게 줄지 않으며, 기초연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국민연금의 평균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비슷해져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하락하고 사보험시장으로 이동 가능성

○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 노인의 국민연금액이 하위 50%~70% 노인의

총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발생으로 연금제도 간 정합성 상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함

〔그림 6-3〕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및 국민연금 수급자(1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 분포



출처 : (좌) 2016 가계동향조사,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 (우) 2017년 말, 국민연금공단 월별 통계

□ 노인의 상대빈곤율 완화는 기초연금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소득비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제2절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1. 사회 격차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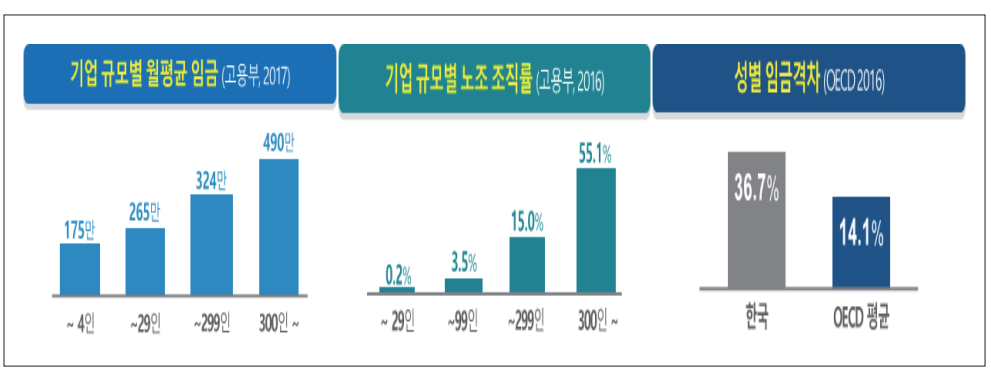
□ 기회와 권한, 그리고 소득의 공평한 배분은 지난 수십년 간 개발시대에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희생된 한국사회의 공정성 확보에 필수적

□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핵심적 원인 중 하나는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성별(남-녀)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산물시장 에서의 대기업 독과점과 수직종속적 원하청 관계 고착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

○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 큰 폭의 임금격차와 비표준화된 임금체계가 대기업의 아웃소싱 및 비정규직의 사용 유인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되는 악순환

○ 기업별 노사관계체제에서 형성된 대기업 ·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구조는 노동약자 대변 기능 미흡



□ 경제 수준에 비해 성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기업임원, 국회의원 등)에서 여성 대표성이 극히 낮아 성별격차 해소의 장애요인

○ 기업의 채용, 배치, 승진, 보상 등 노동시장 전반에 성차별 구조가 내재되어 있고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대등한 경쟁이 어려움

□ 사교육 등으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한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가 미흡하여 공정 경쟁의 기반이 상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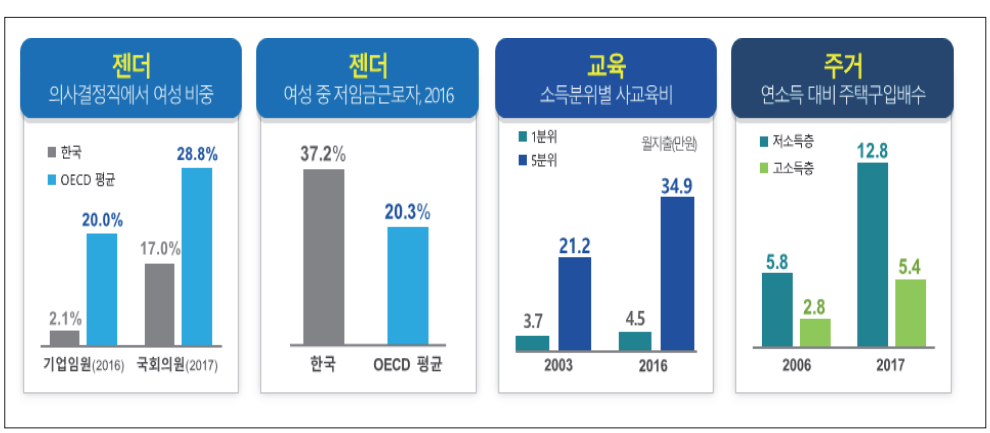
○ 교육과 사회의 양극화 심화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 증대
- 지역 간 교육 여건 및 기회의 격차 심화
- 경쟁 중심 교육체제로 인한 서열사회 조장
- 교육을 통한 성장보다는 결과만을 강조

○ 서열과 경쟁의 교육 패러다임

- 획일적인 서열 중심의 교육
- 지식 위주 암기식 교육
- 학습으로부터 소외와 성장 경로 분절, 자신감 저조

□ 주택공급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주거격차 해소가 진척되지 못함



2. 공정사회 구축의 방향

가. 노동정책 전략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수출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불평등 용인

○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형식적·선언적 정책목표와 실제 정책방향의 괴리

○ 비정규직(간접고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부족

○ 불합리한 원하청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와 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정책의 미비

○ 임금 격차 해소,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지 부족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 사회적 대화체계의 형식화와 활용 미흡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경제성장의 필요 조건(선순환 관계)으로 인식

○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비정규직 감축 정책의 지속 추진(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등)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시정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공정성장 기반 마련(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강화 등)

○ 최저임금 인상,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 저임금 근로자 소득 증대, 동일업무 수행 정규-비정규직 및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 지속

○ 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약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축 및 권한 부여

나. 성 평등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노동시장 성별 격차

- 여성인력 활용 중심의 취업 지원 정책으로 고용의 질 저하 (예 : 시간제 취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유리천장 :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의 형식적 시행과 의사결정에서 영향력 미흡 (예 : 실효성 부족한 제도 설계, 낮은 목표치 설정)

○ 정책추진기반 : 도구 중심의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정책의 주변화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여성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존·법 제도의 실효성 및 실행력 강화 (예 :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시정 기구의 실질화 등)

○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적극적 차별 개선 조치 강화(공공기관 임원 할당제 강화, 민간기업 여성임원 확대 환경 조성 등)

○ 각 부처의 성평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예 :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반 강화)

다. 교육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양극화 확대와 속도를 제어하기에 충분치 못한 정책적 대응 (정책 확대를 위한 실증근거 부족)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중심의 선별적 교육복지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공교육 투자 확대로 모든 아이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

공(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무상교육, 기초학력 보장, 지역균형선발 등)

○ 다문화, 장애, 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교육 복지 제공

라. 주거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주택시장 정부개입 최소화와 시장을 통한 배분, 임대인 위주의 임대차 시장

○ 공급자 위주, 물량중심의 임대주택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 부족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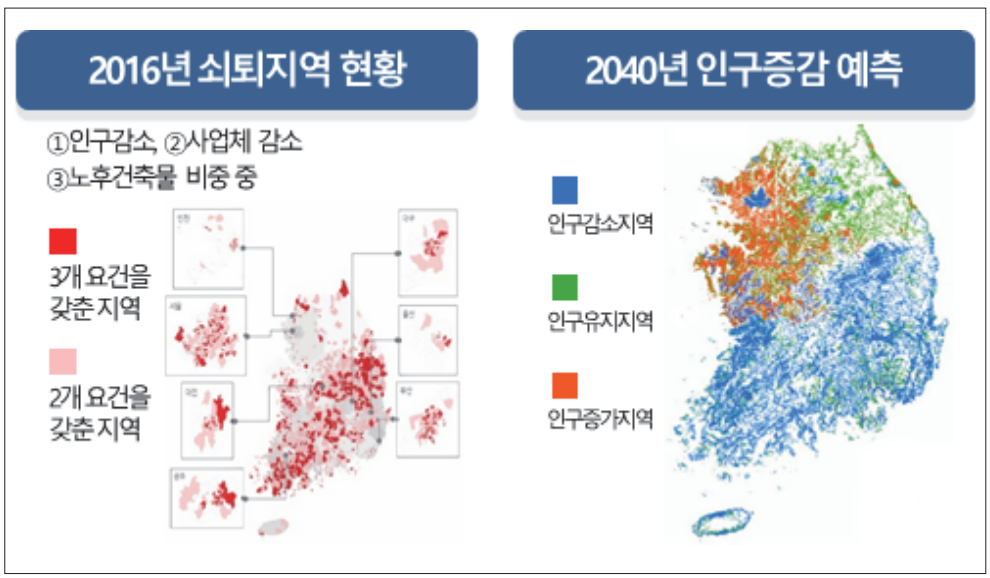
○ 적정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청년 등 수요자 기반 주거 지원 강화(생애주기-소득계층별 맞춤형 지원)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1. 지역 간 삶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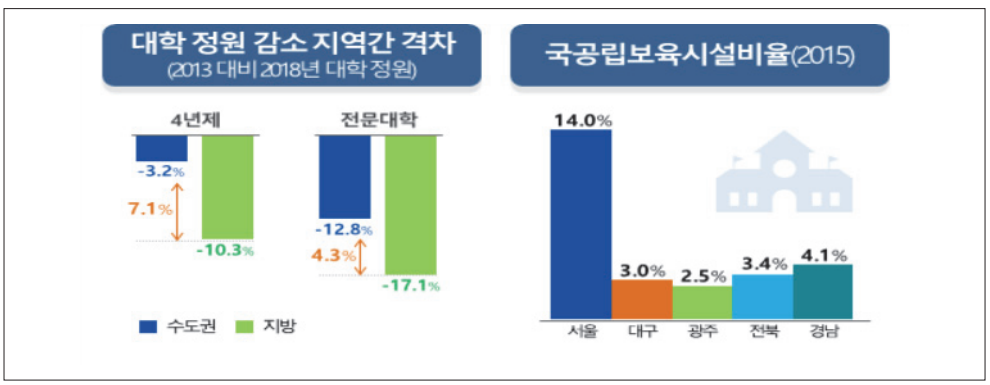
□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인구감소 등으로 심화 예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2040년 전국의 52.9%에 이를 전망



□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학령기 인구 감소로 심화 예상(지방 대학의 입학 정원이 향후 10년간 급속히 감소 예상)

□ 어린이집 등 공공 복지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의 지역 격차도 줄어들지 않아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 상존



□ 쇠퇴하는 구 도심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

2. 지역균형발전의 방향

□ 도시재생 뉴딜 확산과 스마트 시티 구축

□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집중 및 생활 SOC 확대

혁신도시 시즌 2

혁신도시의 '新지역성장거점화'에 집중

특화발전
- 도시별 특화발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확대
- 혁신융복합단지 조성

기업집적
- 특화산업 및 이전기관 연계 기업 유치
- 규제완화 및 사무공간 등 입주지원
- 산학연 생태계 조성

정주여건개선
-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인프라 개선
- 교통체계 개선
- 가족동반 이주 지원

상생발전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및 인재 양성
- 구도심 및 주변지역 연계 상생발전
- 혁신도시 발전재단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 기업입주 1천개, 가족동반 이주율 75% 달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사람중심경제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 토목 SOC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전환
-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SOC 투자** 과감한 확대 (2018년 5.5조 → 2019년 8.7조)
  * 지자체 투자분 포함시 12조원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일자리 효과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모든 지역에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인인 주민주도형·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중단기 계획의 범정부 추진체계(중앙·지자체·민간)

제 7 장 사회정책비전 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제3절 일상 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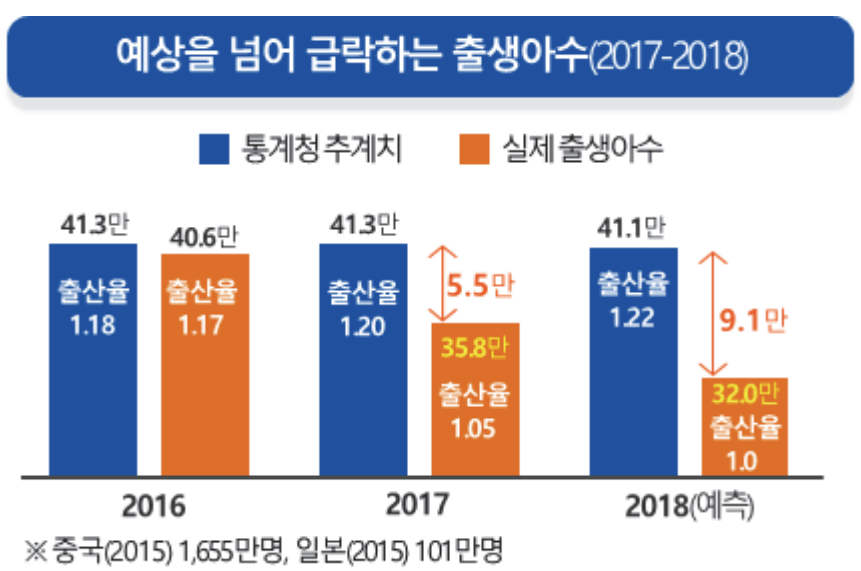
7 사회정책비전 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1. 저출산·고령화의 실태

□ 2017년 출생아 수가 통계청 추계치 2035년 수준(35.8만)으로 급락하여 18년이 앞 당겨졌고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재앙적' 수준의 인구절벽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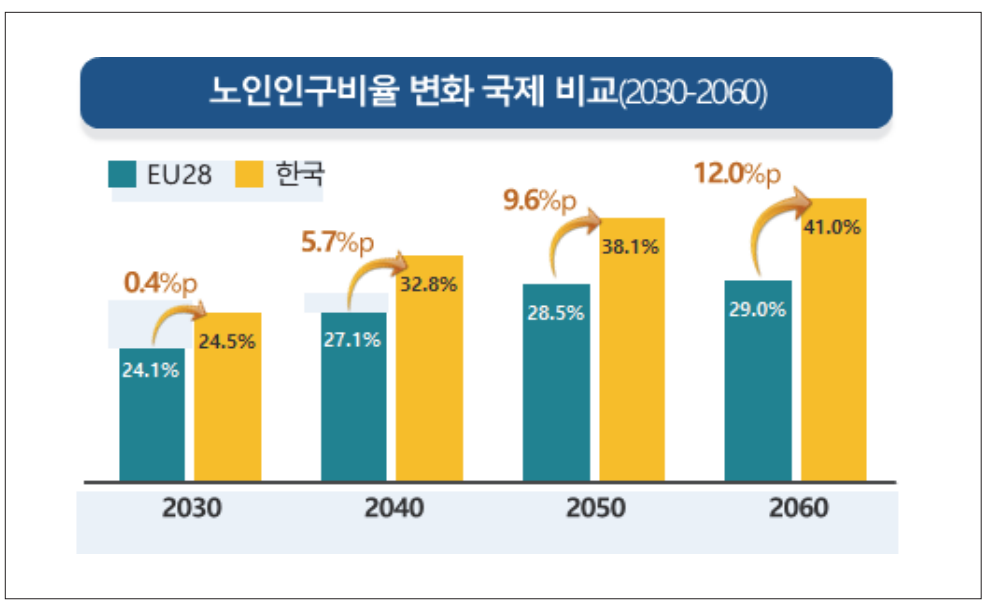
□ 주거, 교육, 독박육아 등 결혼• 출산의 높은 기회 비용,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감소와 출산 급락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되,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 조성

□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을 추월하고 2060년 이전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사회관계망, 빈곤율, 건강상태 등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단독가구 증가 (2008년 19.7% → 2017년 23.6%)로 더 악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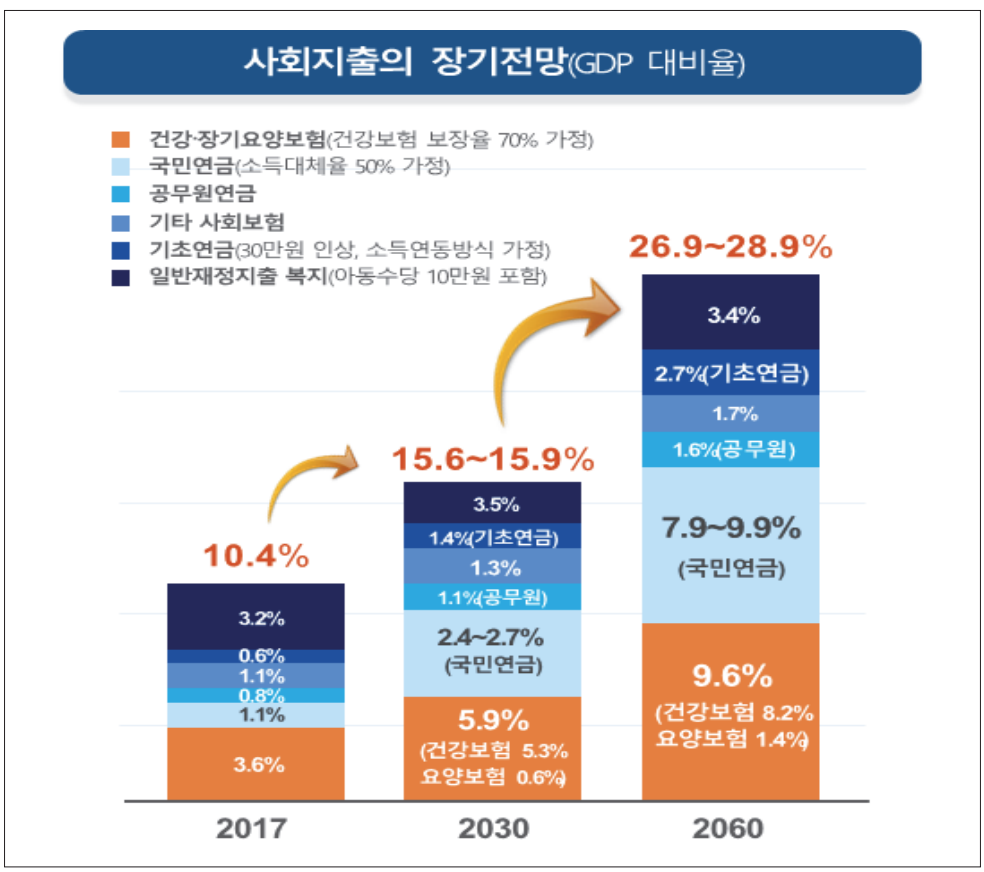
□ 노인을 정책적인 보호 대상이자 소비와 생산의 핵심적인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각 필요

2. 사회지출의 장기 전망

□ 국정과제를 충분히 반영해도 2060년 GDP 대비 사회지출은 26.9~28.9%로 추정되어 현재의 EU 28개국 수준(2014년 기준, 27.5%) 도달

□ 가장 큰 비중은 공적연금지출(국민·기초·특수직역연금 GDP 대비 13~15%)이나 높은 노인비율과 낮은 연금액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사회지출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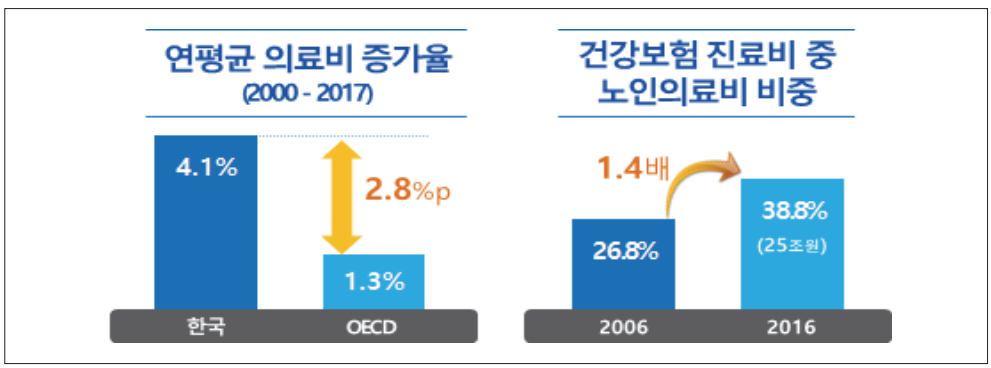
○ 건강보험요양보험 지출은 9.6%로 양호하나 가계의 사적 의료비 지출을 포함할 경우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 예상

○ 고령화 대비 복지재정 합리화의 핵심은 무조건적 재정축소보다 공적연금 비중 확대와 건강 요양보험 비용의 합리화임

○ 특히 민간의료비의 억제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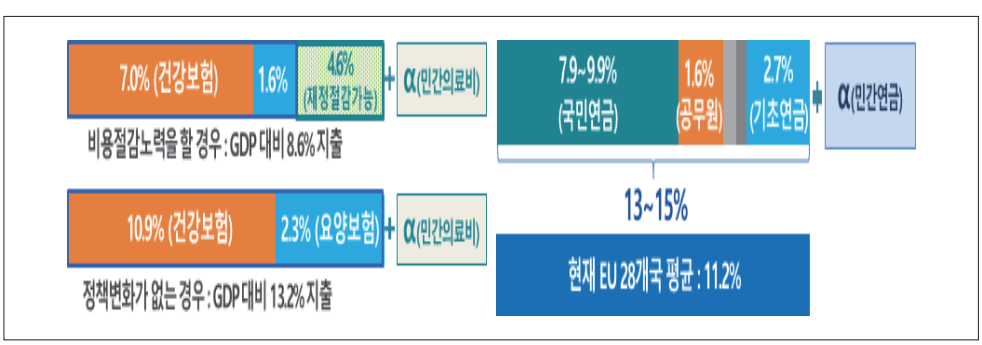
3. 의료 및 연금비용의 전망

□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1차 공공의료 및 공공요양서비스 강화 등) 상당한 재정적 사회적 부담 예상(건강보험 진료비 중 요양병원 진료비의 비중 2006년 0.3% → 2016년 9.4%)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비용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60년 GDP의 13.2%를 지출하나 비용절감 노력 시 8.6% 수준으로 4.6%p 감소 가능(OECD, 2015)

□ 공적연금지출은 2060년 13~15%로 현재의 유럽 수준에 도달하나 노인인구비율은 EU 평균 29%, 한국 41%로 12%p 높을 것으로 추정



□ 주력 소비층인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 상황에서 총인구의 41%에 달하는 1천 9백만명의 노인들이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내수 위축 발생. 연금지출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

4. 저출산·고령회 대비 정책 방향

가 저출산 대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 및 양육 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 이상적 가족모델로서 핵가족을 전제로 한 국가주도의 캠페인과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서 도구화

○ 고착된 성불평등 개선 없이 여성에게 책임 전가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 등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

○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성평등적 사회 기업 문화의 적극적 조성

나. 고령사회 대책 : 연금, 의료, 일자리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공적연금, 건강보험비용 억제에 과도한 초점, 가계 지출 사적연금사적의료비에 대한 무관심

○ 베이비 부머 등 주력 소비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 과소 평가

○ 고령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해 4050세대 등 미래 노인의 인적 역량 축적의

중요성 미인식, 굵고 짧은 생애주기로 설계된 고용시스템으로 인한 고령자 차별적인 고용제도와 관행

○ 건강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미흡 : 건강관리, 노인 친화적 주거, 활동적 노인 사회관계망 등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가 중요

○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 4050세대의 인적역량강화 정책 체계화, 고령자가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 구축(긴 생애주기 고용시스템 설계, 정년연장 및 관련 지원, 임금체계개편 등)

○ 건강한 노후는 고령화 비용 합리화의 주요 수단. 건강 주거사회안전망을 노인 친화적으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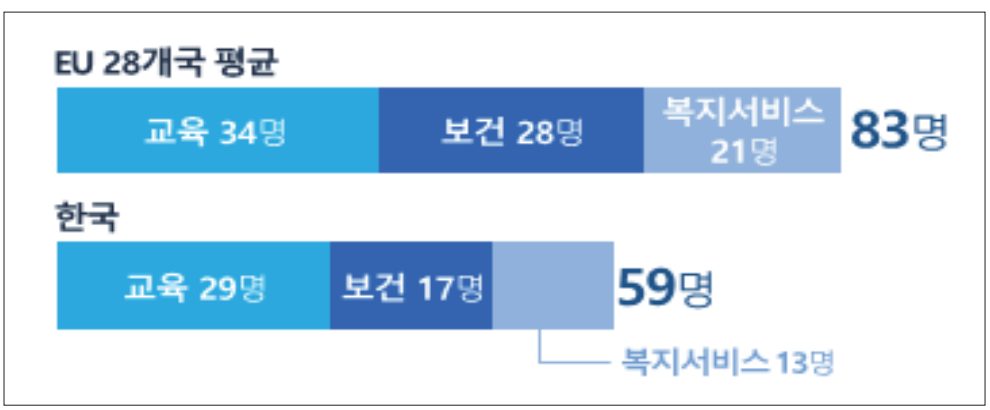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1. 보건복지 일자리 실태

□ 사회정책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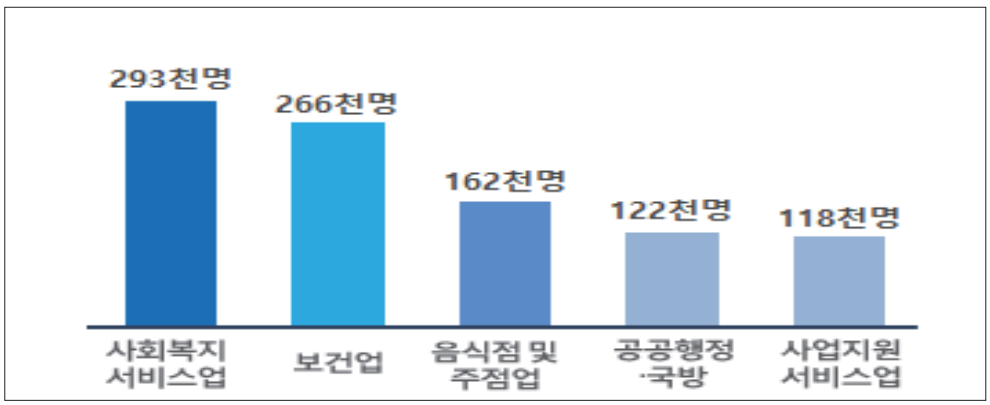
□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음

〔그림 7-1〕 인구 1천명 당 교육보건복지 취업자 수(2017)



□ 11년간(2007~2017)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3%이나 보건복지업은 10.3%로 급속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10년간 취업자 증가 예상 업종 중에서도 1,2위를 차지

〔그림 7-2〕 2016-2026, 취업자 증가 예상위 5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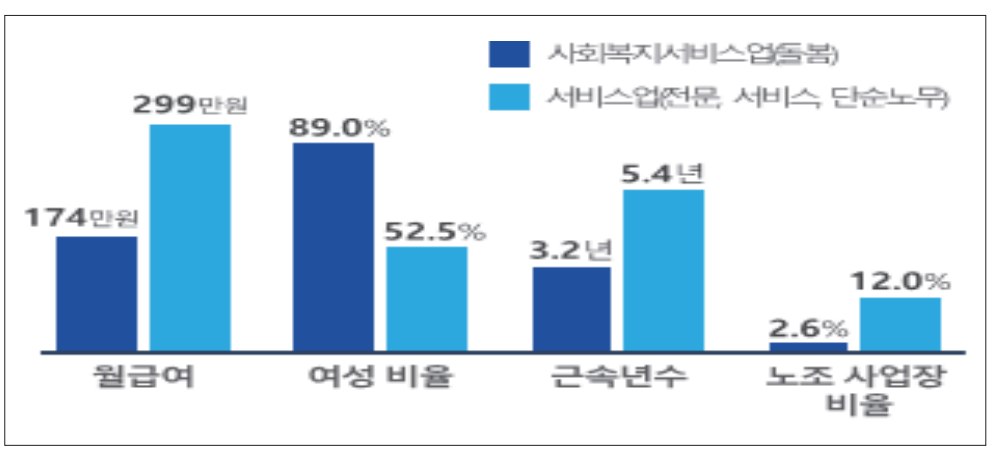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2018)

□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고 민간일자리는 임금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 열악. 잦은 이직으로 숙련이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품질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성별 임금격차 완화, 더 나아가 아동·성인의 인적자본 확충에도 기여하여 경제사회적 외부효과가 매우 큼

〔그림 7-3〕 돌봄 분야 근로 실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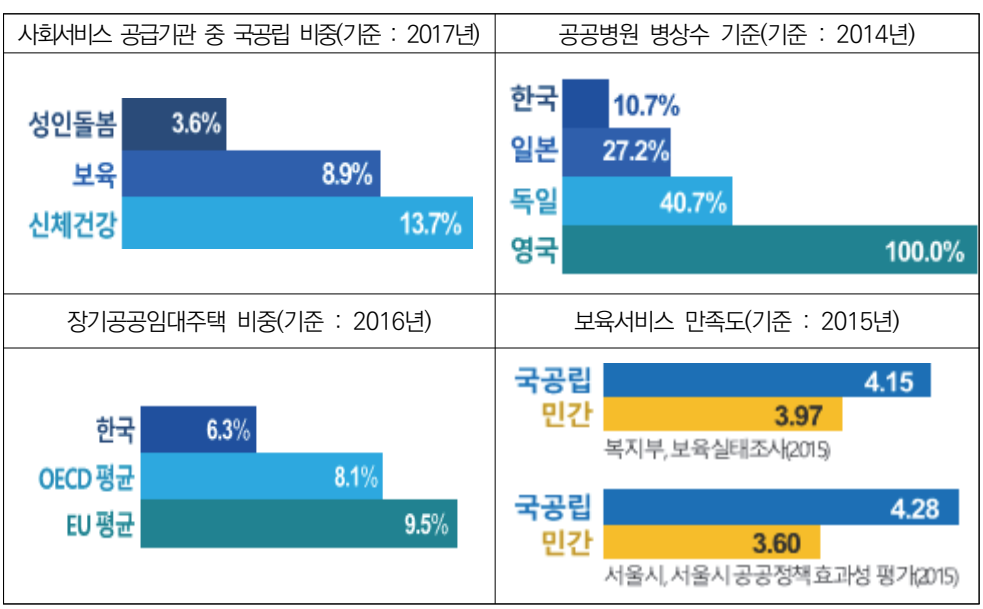
자료 :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 보건복지서비스의 공급구조 : 공공부문의 미흡

□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보다는 민간공급자를 확충해와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민간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이 낮은 서비스의 질로 이어져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동시에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수준이 아님

□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공급자 비중 확대 (공공보육시설 및 공공유치원 이용률 40% 달성)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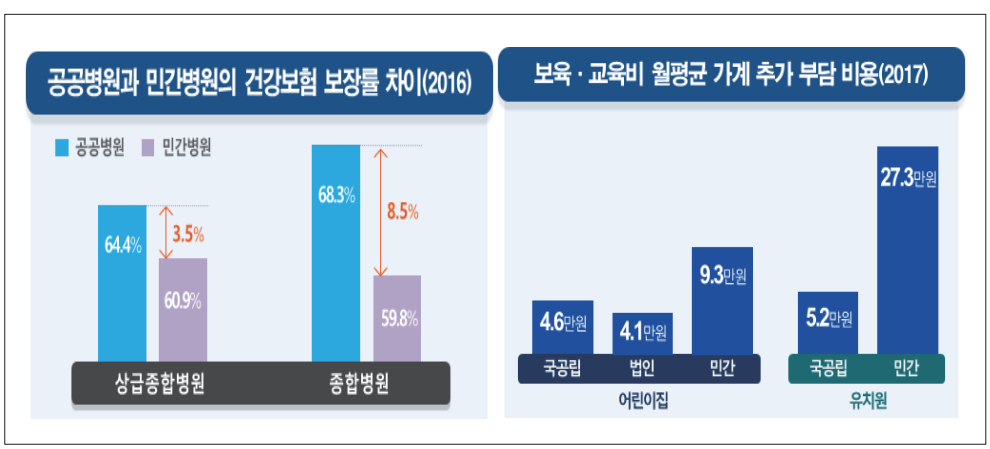
주 1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총 전체 주택 재고 대비 비중으로 영구, 국민, 다가구매입, 행복, 기존주택 전세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가 포함됨
2 :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임

3.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재평가

□ 공공보건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비용절감 효과

□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공공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민간병원보다 약 4~9%p 더 높으며, 민간병원의 낮은 보장률은 결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짐

□ 연간 10조원 이상의 보육과 유아교육비를 정부가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공급자의 영리추구 동기로 인해 정부의 막대한 보육지원비의 의미가 상실되고, 가계의 보육비 부담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4. 사회서비스의 개편방향

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신뢰성 강화

□ 기존 정책패러다임

○ 공공서비스 공급자 확충을 최소화하고 민간공급자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판단

○ 민간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기관 경쟁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

져온다는 시각

○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공급자의 서비스가 공공 공급자보다 품질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

○ 공급자 지원방식의 문제점(예 : 시설의 사유화, 관료적 통제)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지원방식을(바우처) 도입했으나 복지체감도 향상과 서비스품질 향상 효과성에 대한 논란 제기

○ 각종 서비스의 독자적 발전으로 지역단위에서 서비스간 연계성, 통합성 부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 발생

○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보다 시설(기관)수용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민간서비스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부재(예 :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비스공급자 등록제로 전환)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자 확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총 비용을 합리화 시킴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경쟁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한 공공민간 간 협력 관계 구축

○ 서비스질이 좋은 공공 공급자를 적정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

○ 적정 수준의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확충을 전제로 수요자 지원방식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수요자 지원방식이 서비스 질 제고에 더 효과적인 영역을 선별

○ 지역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
(예,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 지역단위의 개방적 시설(중간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시스템(커

뮤니티 케어) 구축

○ 시설 및 기관의 품질관리체계 효율화(정보공개 강화, 기관 등록제 → 지정제 재전환 검토)

나.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

□ 기존 정책패러다임

○ 민간공급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부문 일자리의 과잉과 공공부문 일자리의 절대 부족 (예 : 2017년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 6천명으로 10.9%)

○ 낮은 수가체계에서 민간서비스공급기관간 경쟁 유도가 인건비 경쟁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는 등 민간공급자의 일자리 질 하락

○ 보건복지 일자리를 여성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함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준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예 :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34만개 달성), 민간 공급기관의 일자리 질 개선 유도

○ 수가체계의 재검토와 민간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통해 인건비 출혈경쟁을 막고 고용의 질 개선

○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을 남녀 임금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

제3절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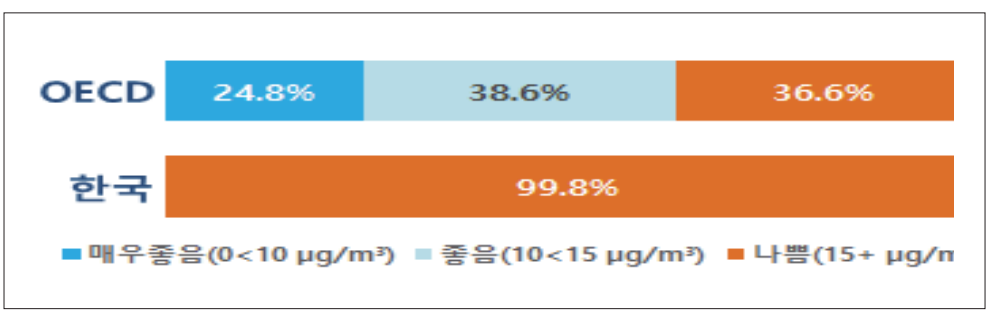
1. 일생상활의 불안전

가. 환경, 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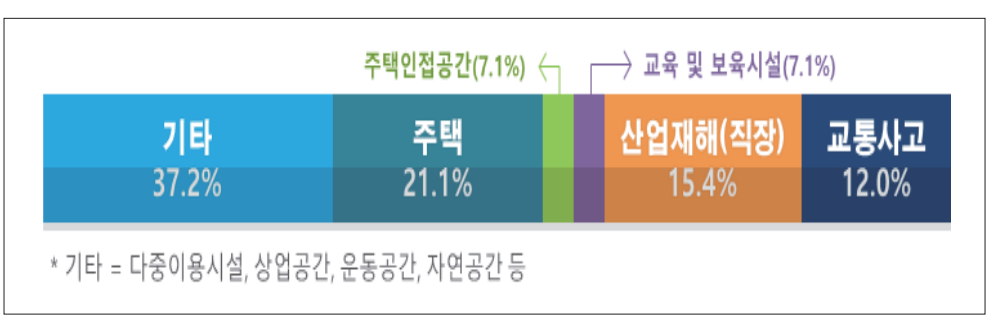
□ 국민의 높아진 환경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유해 매체 대책 등 환경정책 전반의 지체 현상 발생

□ 건물의 노후화, 대형화가 진행되고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대형 복합사고의 위험 증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노출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그림 7-4〕 일상 생활에서 미세먼지 노출 비율



〔그림 7-5〕 2006년 한국사회 사고 총량(총 1,238만 건)



나. 여성폭력과 안전

□ 디지털 성범죄(예 : 몰카) 대응과정에서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여성의 일상 생활 안전보장과 대응체계 변화에 대한 요구 증가

○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 체계의 미흡

○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를 중심으로 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개별적인 법제도가 발전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대응의 사각지대 발생

○ 성범죄 대응의 성별 공정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

□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2.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방향

가. 환경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선개발 후 환경 : 개발부처 주도 사업계획 설정으로 환경부는 문제 발생 이후 사후적 개입

○ 공해방지시대의 소극적인 매체별 기준주의 환경관리와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 미흡

○ 개발로 인한 갈등 발생시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과 형식적 소통으로 갈등관리 취약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예방적 환경목표 설정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선순환 구조 확립(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환경정책적 위상 복구, K-SDGs 추진)

○ 수용체(사람)중심의 맞춤형 환경기준 설정(환경질환 등).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적 정책접근(규제에서 서비스로)

○ 환경 관련 정책설계 평가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환경민주주의 강화

나. 안전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안전을 개인의 불행으로 인식,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해 위험을 수용하는 위험감수사회

○ 사고발생후 2차 피해감소를 위한 공적책임 미흡 (예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 자연재난과 사회위험요인이 연계된 신종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 미흡 (예 : 메르스사태, 대형 홍수, 구제역 등)

○ 백화점식 안전규제와 물량위주의 보여주기식 전시성 안전행정

○ 제조업, 임금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 산재보험 체계, 위험의 외주화(예 : 주요 30대 기업 산재사망사고의 85%이상이 하청노동자에게서 발생)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안전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위험예방사회 구축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난계획 행동지침 마련 및 사고 후 공동체 복원력 방안 강구

○ 신종 대형 복합 재난 대비 재난안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컨트롤타

워 정비(예 : 국제적, 중앙정부 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 등)

○ 안전규제 및 감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망사고 절감으로 국민체감형 안전사회 실현

○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의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 원청발주처(건설)의 책임 강화

다. 여성폭력 예방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여성 폭력에 대한 분절적 접근으로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등 다양한 양상의 폭력 대응 미흡

○ 여성 폭력 대응 시스템의 몰성성(gender-blindness)과 실적 중심 폭력예방 교육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성별 위계에 근거한 폭력(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 피해자 관점의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구축과 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 강화

제 8 장

사회정책비전 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1절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제2절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제3절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8 사회정책비전 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1절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1.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및 문화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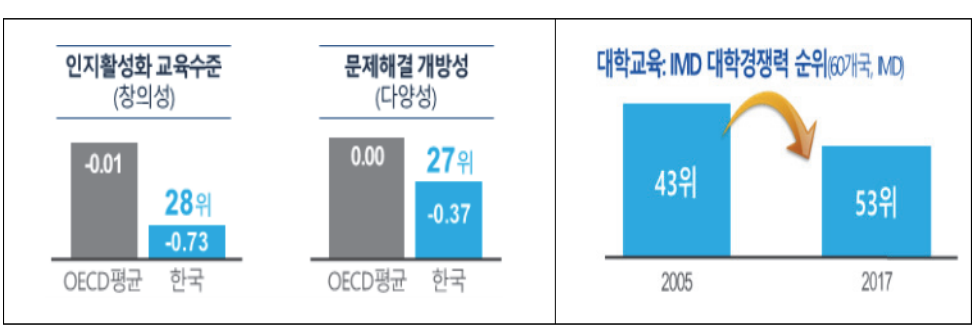
가. 초·중등, 고등교육 체계

□ 우리나라 초중등 및 고등교육 체계의 한계

○ 산업사회모델의 인력 양성과 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를 보임

- 한국의 PISA 점수는 최상위권이지만,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제해결 개방성과 인지 활성화 교육수준은 최하위권
- 학력·학벌 경쟁 위주 교육 : 대학 입시에 종속된 초중등 교육
- 교육비 지원 중심의 획일화된 선별적 교육복지
-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 구조 고착

〔그림 8-1〕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다양성 부족 실태(PISA, 2012)



○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으로 인한 문제점

- 공급자로서의 교사, 수요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 상정
- 평가 결과의 전면적 공개를 통한 경쟁 유발
- 강제적 경쟁을 통한 질 제고

○ 교육 양극화와 타율적 교육의 모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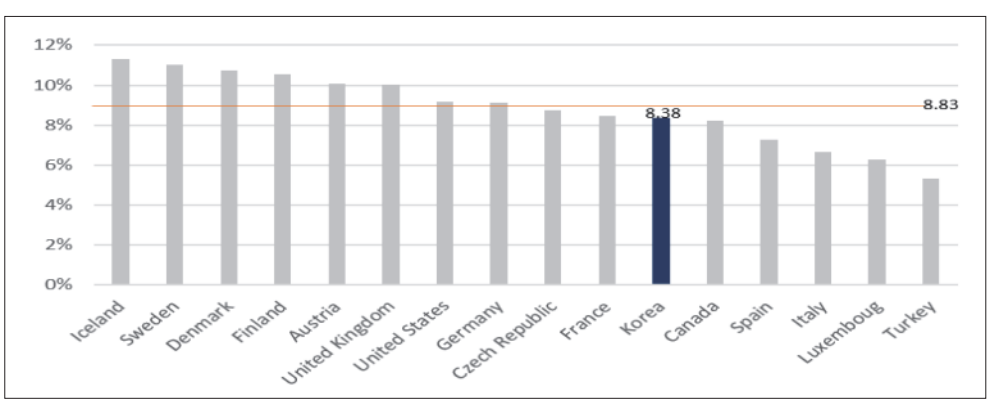
- 산업사회의 평균적인 인간 양성 체제
- 삶(생활)과 유리된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평가 체제
- 사회, 지역과 분리된 폐쇄적 학교와 중앙정부의 일방적 교육 체제

□ 대학교육 역시 대량의 평균적 교육양성체제와 분절된 교육과정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며, 동시에 정부주도 평가와 무한 경쟁 서열화 체제로 대학의 자율적, 창의적 역량 강화 미흡

나. 문화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 문화지출은 가계 및 정부 지출 모두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임

〔그림 8-2〕 주요 국가별 가계 소비지출 대비 문화여가지출 비중(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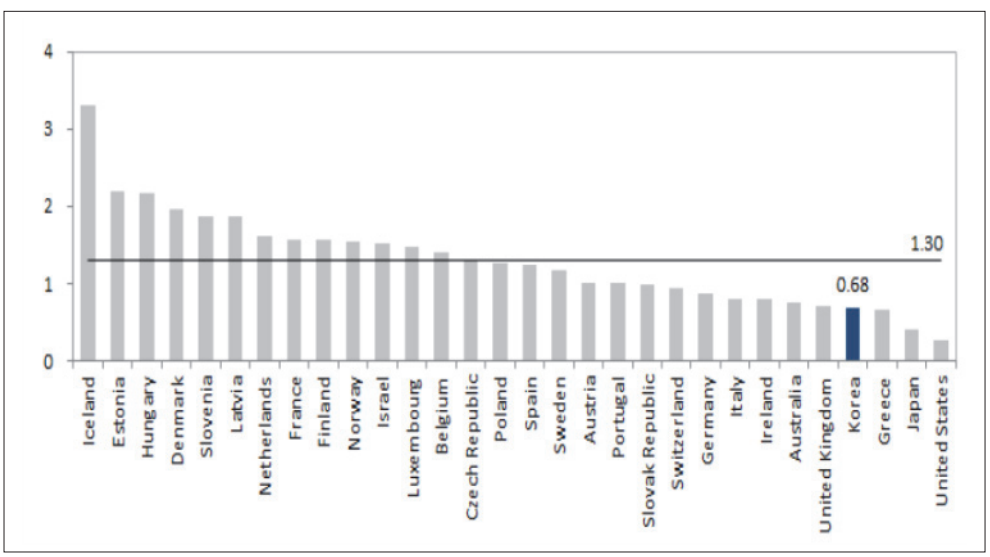


○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적고(정부지출 중 문화관련 예산은 한국 GDP 대비 0.8%, OECD 평균 1.2%) 가계의 문화지출비도 크지 않아 문화향유가 혁신역량 축적으로 연결되지 못함

-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비 비율) 아이슬란드(11.3%), 스웨덴(11.0%), 덴마크(10.75%), 핀란드(10.55%)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를 상위하였고, 우리나라는 8.38%에 그침(OECD 국가 중 자료 제출 국가 기준)

○ (일반정부[3])의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 2014년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이며, 우리나라는 0.68%로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함

〔그림 8-3〕 OECD 국가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2014)



□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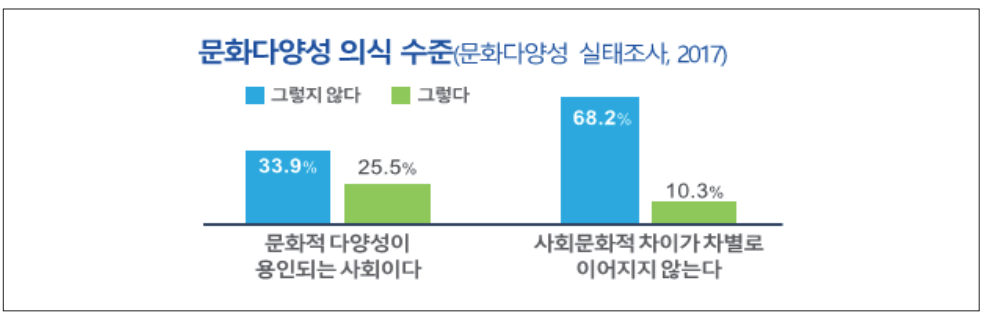
○ 문화여가시간, 비용 및 역량 부족

- (문화여가실태) 그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

3)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문화여가활동에 집중

- (문화여가시간) 지난 10년 간 문화여가시간 부족이 문화, 체육, 관광 등 문화여가활동 참여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등장
- (문화여가비용) 불확실한 미래, 경제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문화여가비 지출감소 및 저소득층 참여형 문화여가활동(문화·체육·관광 등) 제약 가중
- (문화여가역량) 문화여가 중요성·문화권 인식 및 자기 주도적인 문화여가 향유능력 부족,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높지 않음



□ 문화여가공간의 불균형 및 접근성 제약

○ (문화여가공간 격차) 낙후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문화여가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중소도시·군 등을 중심으로 문화여가시설 사각지대 발생

○ (공간 적합성) 정책공간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간 괴리 발생

- (정책 공간)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공간, 자연 공간 등
- (국민 공간) 아파트 내(집주변) 공터(21.6%), 생활권 공원(20.2%) ('16년 여가활동조사)

○ (접근성 제약) 국민 공동 생활권에 속하는 공간의 사유화, 불법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접근 제약

□ 수요자 중심의 문화여가정책 부재

○ (공급자 위주) 국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개별사업 위주의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여가약자에 대한 정책배려 부족

○ (취향 적합성) 일반 국민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화된 장르(문화, 체육, 관광 등) 위주의 사업추진

○ (서비스 편의성) 국민의 생활양식, 지역민의 특성, 참여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로 문화여가참여 불편 초래

○ (통합추진체계 부재)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여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부재로 범부처 및 중앙,지역 간 조율 미흡

2. 교육제도 개편 및 문화정책 방향

가. 초중등교육 및 청소년 지원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경쟁과 결과 중심의 학력관 : 지식암기와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

○ 개별 경쟁의 폐쇄적 학습체제 : 협력성을 상실한 학습 경쟁, 산업사회의 평균적인 인력양성체계와 표준화된 평가체계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된 교육 체제와 사회지역과 분리된 학교

○ 학교 밖 청소년 및 NEET 에 대한 제한적 지원체계

○ 영유아기 언어발달 및 기초학력 증진 중심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학생 성장, 참여 중심의 새로운 학력관 정립 : 모두의 잠재력과 역량을 함양하는 포용적 교육 가치 실현

○ 협력적 학습 생태계 체제로의 전환 : 창의력과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협업 지향적
교육과정 수업 평가체계의 일관된 혁신

○ 지방교육자치 확대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자치 실현,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 진로선택 및 활동역량 지원

○ 청소년기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응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나. 고등교육

□ 기존 정책패러다임

○ 대학의 개별 경쟁 및 서열화 심화(예 : 학교별 고립 폐쇄적 운영, 지식재생능력 위주 교육과정 운영)

○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평가로 대학의 자율성 약화와 획일화

○ 고등교육의 지역 대학간 격차 심화 및 고등교육의 시장화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대학간 공유성장을 위한 연계협력형 대학 체제 개편(예: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대학간 컨소시움 구축, 융복합 교육과정 활성화)

○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진단 체제 구축과 대학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

○ 고등교육의 투자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간 , 대학간 격차 완화

다. 문화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수동적 소비 위주의 문화정책

○ 정치적 · 이념적 편향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 내용 규제(예 : 블랙리스트)

○ 공급자지원정책으로 수요자 체감도가 떨어지고 지역별 문화여가시설의 사각지대 발생(예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여가시설 배치)

○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 편향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선택권 제약(예 : 영화, 게임 등으로 문화향유 편중 현상)

○ 문화정책의 개별화 · 분절화 : 일, 돌봄 등 다른 시간사용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의 한계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정책

○ 문화 · 예술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생애주기에 기반한 사회참여적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확대 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요자 지원 강화

○ 포괄적 문화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영역의 지원과 장애, 젠더,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 기관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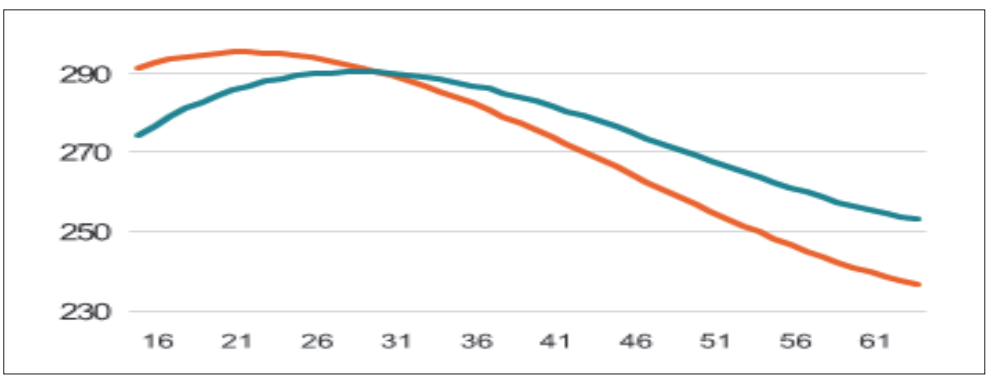
○ 쉼과 여유를 통한 일상적 문화향유권 실현으로 개인의 내재된 창의성 회복(예 :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착, 장애 없는 문화여가서비스 환경 조성 등)

제2절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1. 성인기 인적역량의 실태

□ 한국은 중고등교육기까지(10대 후반-20대 후반)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유지하나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함

〔그림 8-4〕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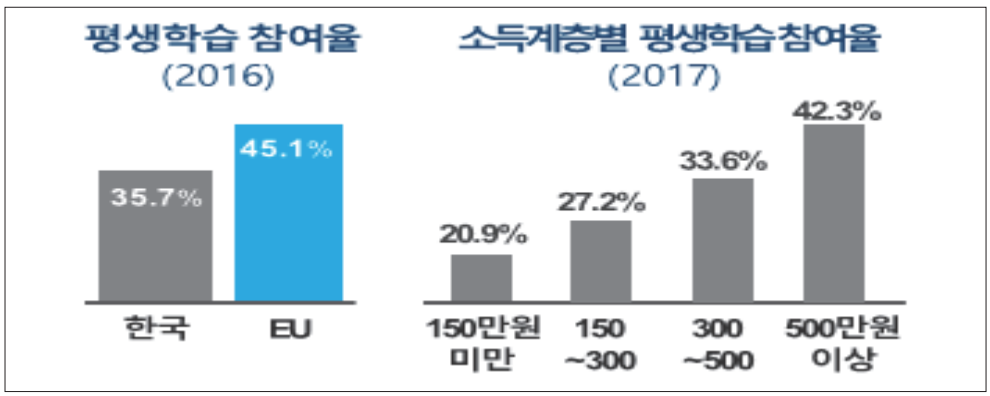
주 : 역량은 '언어능력(literacy)'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
출처 : OECD, 2013.

□ 성인기 인적역량 확충에 필요한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으며 계층별 격차가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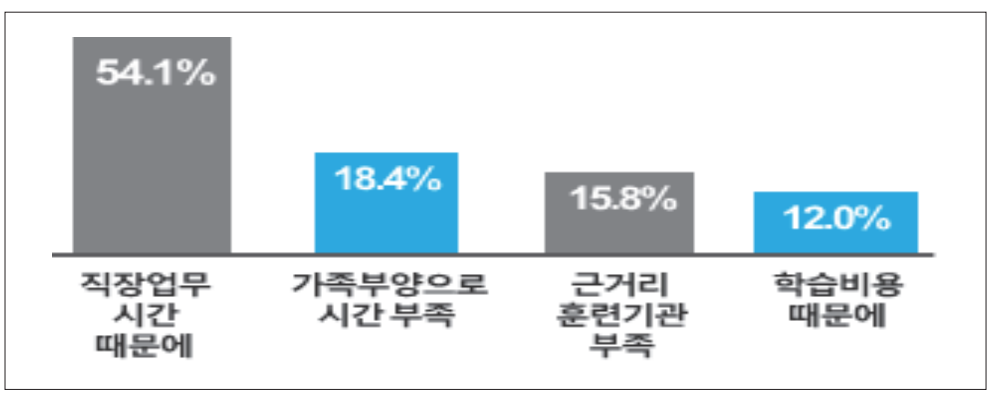
□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부족 등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것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를 막는 구조적 원인

□ 평생학습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도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뒤쳐져 있고, 공공학습기관 부족, 교육기관간 질적지역 간 격차가 온존

〔그림 8-5〕 평생학습 참여양상



〔그림 8-6〕 평상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2. 평생학습체계의 개편 방향

□ 기존 정책패러다임

○ 관련 부처(교육 노동부 등) 간 평생학습, 직업훈련정책의 분절적, 비효율적 운용

○ 평생 ·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지역의 산업수요와 유리되고 지역 내 주요 인프라(지역대학)와 연계 부족

○ 평생 · 직업교육 사각지대(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고려 미흡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거버넌스구조 구축

○ 지역별 산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량 강화) 지역대학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차별 개선으로 포용적 훈련체계 구축

3. 일터 문화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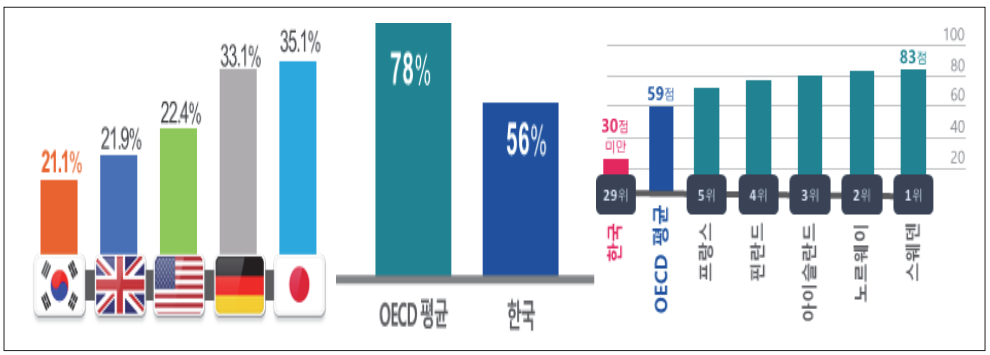
□ 직장 내 의사결정 분권화와 직무 자율성 정도는 참여를 통한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기반이 됨

□ 한국의 일터는 과업 재량과 업무시간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낮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직무만족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일터에서 여성의 입직과 승진 역시 OECD 최하위권(유리천장지수 29위)으로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활용하지 못하며 위계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음

□ 일터의 위계적, 타율적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자율적, 그리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일터 혁신을 통해 노동자의 행복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8-7〕 일터에서의 재량 및 직무만족도, 유리천장 지수



주 : 좌측 그래프는 주요국 일터 과업재량 정도 비교를 제시한 것으로 이때 과업재량은 일의 재량 정도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하고, 가운데 그래프는 일터의 직무만족도를 국제 비교한 것으로 여기서 직무만족도는 현 직업에 매우 만족함, 또는 만족함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우측으 ㅣ그래프는 여성의 유리천장지수를 제시한 것임.
자료 : 좌-OECD(2013) / 중(OECD, 2012) / 우(The Economist, 2018)

4. 일터혁신의 방향

가. 일터혁신정책

□ 기존 정책패러다임

○ 노동이 배제되는 방식의 기술 혁신 추구와 위계적, 비민주적 조직문화 방치

○ 일터 혁신 관련 정책의 형식적 운영과 기술(예 : 컨설팅 사업) 및 현금지원 정책 위주

○ 노사관계 개선, 여성 차별 배제 등 일터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의 형식적 운용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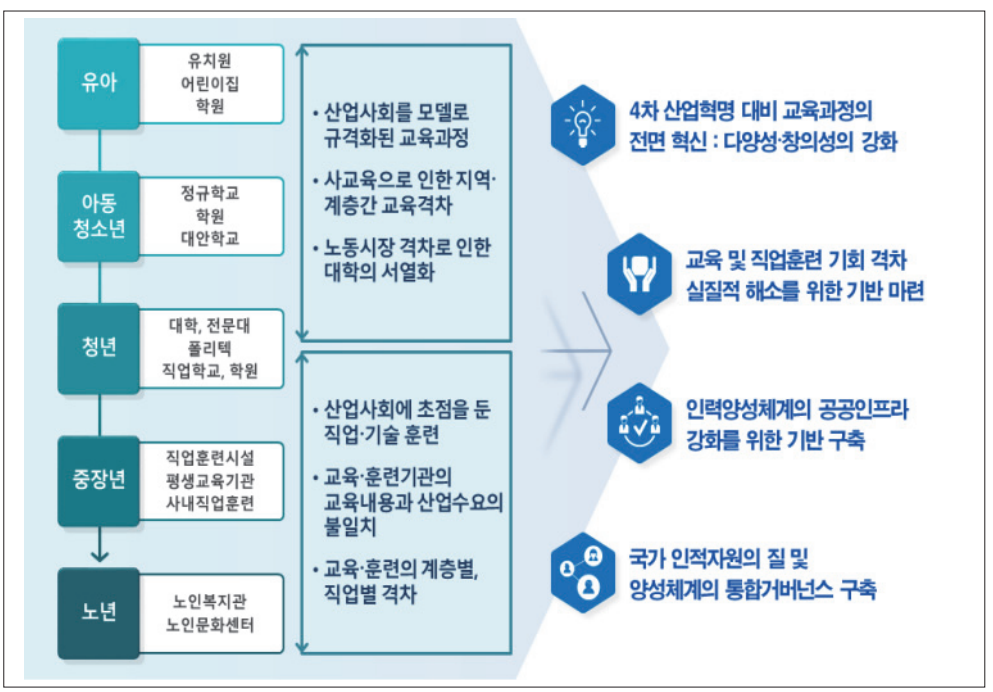
○ 노동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일터 문화 정착 유도

○ 중소기업 일터 혁신 관련 정책의 실질적 운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내부 혁신 유도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실질화로 일터 혁신 유도(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등)

5.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향

〔그림 8-8〕 국가 총인적자원의 질 및 관리체계 혁신 방향(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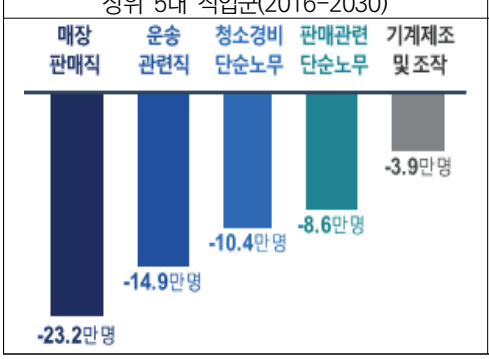
제3절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1. 고용구조의 변화

□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2030년까지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일자리 축소 예상(한국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 531대로 세계 최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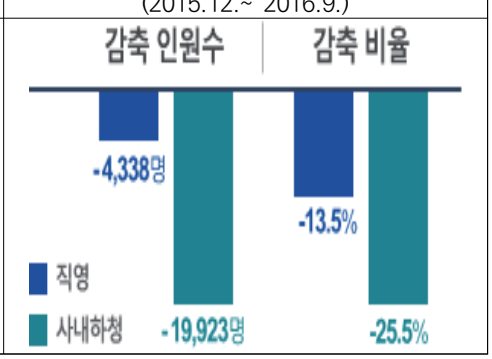
□ 경기변동과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산업(예, 조선업)에서도 부분적, 국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상위 5대 직업군(2016-2030)



자료 : 고용노동부, 2018

경남7개 조선소 인력 구조조정 현황
(2015.12.~ 2016.9.)



자료 : 노동연구원, 2016

2. 고용구조 변화(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 기존 정책패러다임

○ 핵심 당사자인 노동시장 약자(하청) 등이 구조조정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

○ 일시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를 구분하지 않고 재무적 관점에서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근로자 퇴직 중심의 인력구조조정 방식 일상화

○ 사후적, 미봉적인 구조조정 정책 : 위기 상황 직전이 되어서야 정책적 개입을

고려

○ 업종지역별로 분산된 대응체계 및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지원제도와 정책집행체계의 분절화

○ 고용안전망이 실업자구직자들의 개별적 상황 및 욕구에 부합하지 못함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하청 근로자 등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적극 활용

○ 기업경쟁력 약화의 장단기적 원인 분석이 선행되고 퇴직이 최후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예 : 경기침체에 대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독일 사례)

○ 구조 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 구축(예 : EU의 변화 예상과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 유사지원제도(예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의 연계운용 및 중앙 지방 간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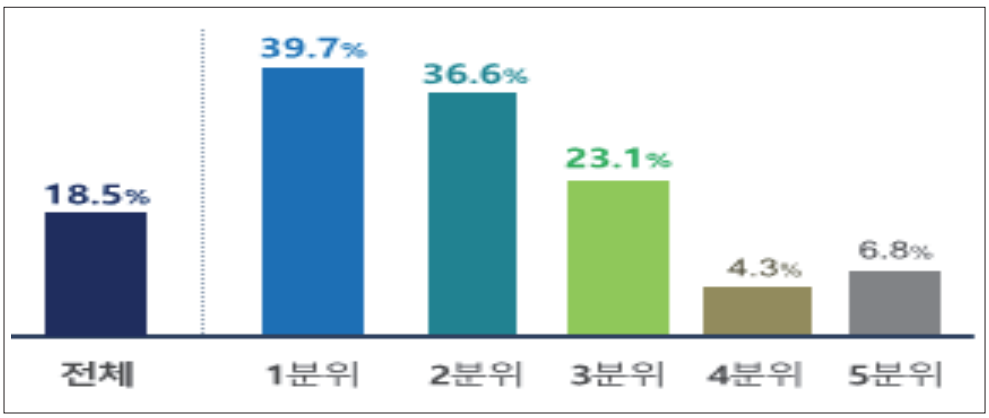
○ 실직한 40-50대 가장을 표적화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개발(예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대책,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행 등)

3. 고용안전망의 실태

□ 한국의 구조조정은 사내하청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실직자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숙련을 상실하고 빈곤 위험에 직면

□ 기술 변화와 경쟁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숙련을 보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충실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8-9〕 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실직 후 빈곤율(실직 후 3분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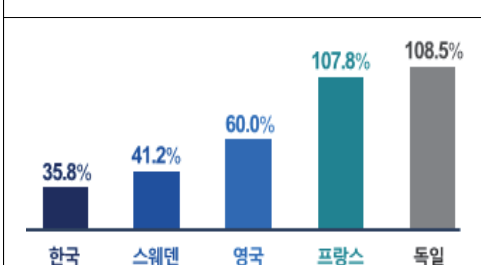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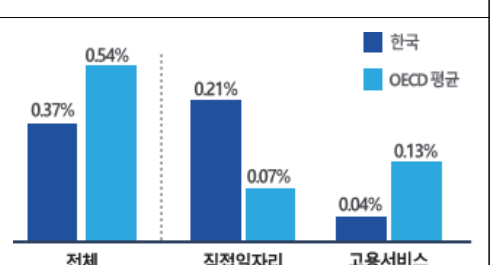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2011)

□ 한국의 실업급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낮은 수혜율, 낮은 보장성과 짧은 기간 등으로 실직자의 소득보장기능이 극히 미흡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대부분의 예산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효과적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미흡

□ 약한 고용안전망은 노동시장의 하향 이동과 빈곤으로 실직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여 개인은 물론 경제사회 혁신의 지체 요인이 됨

실업자 대비 실업관련급여 수혜율(2004-2014 평균)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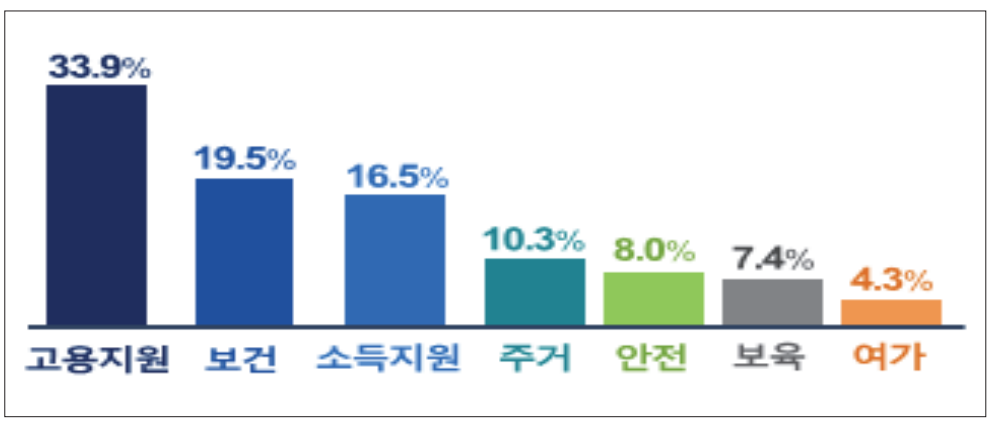
자료 : OECD, 고용노동부, 통계청

자료 : OECD SOCX(2016)

□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야 함

□ 충실한 고용안전망은 일자리와 숙련의 유지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혁신 능력의 기반이 됨

〔그림 8-1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자료 : 통계청(2017)

4. 고용안전망의 개편 방향

□ 기존 정책패러다임

○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기술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고용안전망 대책이 부재하고 개별 정책별로 대안 마련

○ 실업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 실효성 있는 통합 운영 결여

○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관성 결여와 낮은 보장성으로 일자리 상향이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대안 모색 미흡

○ 위급한 고용위기 발생 시(예 : 외환위기, 청년고용) 고용서비스가 최소수준으로 확대되고 그 이후 관련 인력에 대한 양적 · 질적 투자 미흡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 통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용안전망(예 : 비정형근로자 보호체계 등) 구축 필요

○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고용안전망 운영체계 구축

○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보편적 적용, 실업부조제도 도입,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연장 등 소득보장정책의 적극적 확대 검토

○ 직접일자리사업을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정책 효과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통폐합 추진

○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가 모든 노동시장정책에 연계되도록 기본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대 필요(예 : 일선 상담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제 9 장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9 미래 한국 사회의 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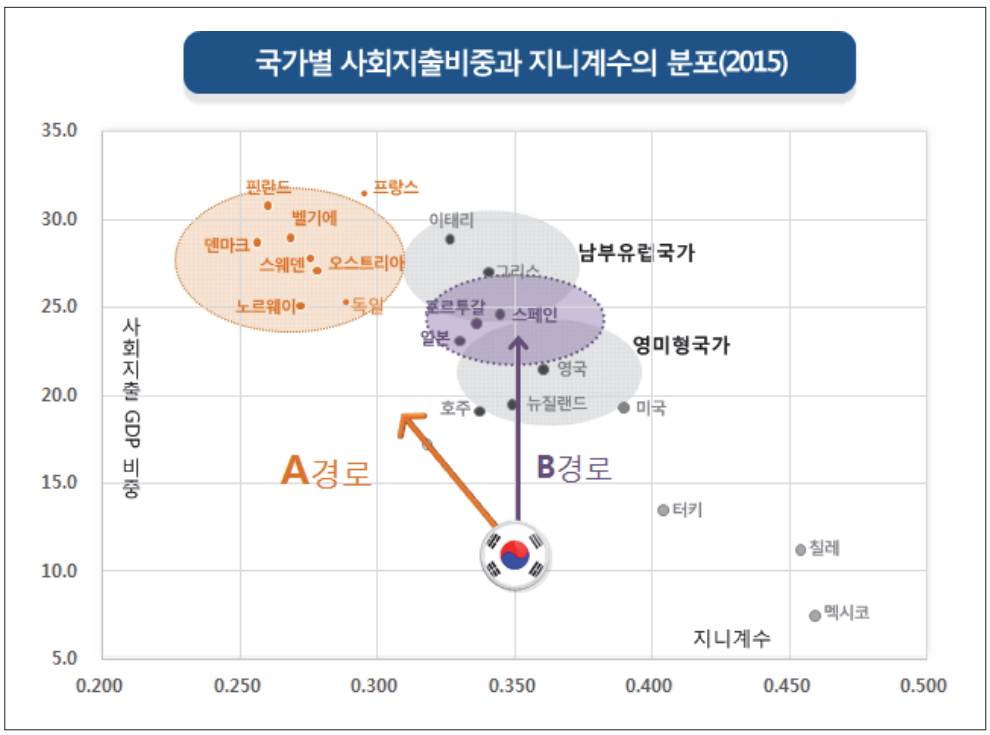
□ 사회정책의 혁신이 없으면 한국은 노동시장 복지격차가 극심한 남부유럽 국가의 특징과 미흡한 공공복지로 불평등이 심한 영미형 특징이 결합된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가능성(B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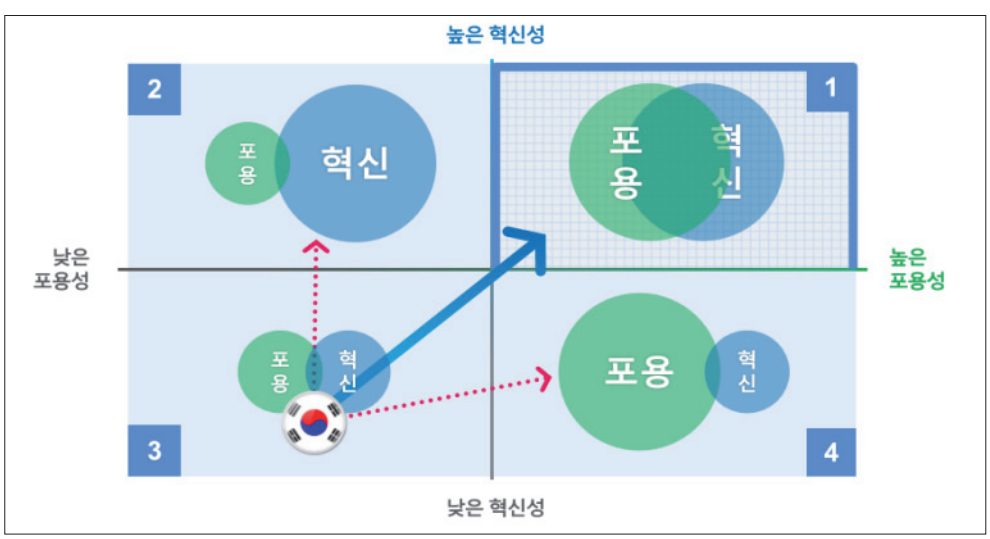
○ 영미형은 혁신능력이 최고 수준이나 남부유럽은 높은 복지비를 지출에도 사회혁신 능력이 낮음

- 상위소득 20% 및 하위소득 20% 계층에게 가는 현금급여의 비중(OECD, 2014) : 스페인(25%/10%), 이탈리아(34%/9%), 포르투갈(40%/11%), 그리스(31%/8%), 한국(25%/25%)
- OECD 삶의 질 지표(OECD, 2017) : 스페인(19위/38개국), 이태리(25위), 포르투갈(28위), 그리스(35위), 한국(29위)
- 사회혁신능력(The Economist, 2017) : 스페인(28위/45개국), 이태리(17위), 포르투갈(22위), 한국(12위)

○ 바람직한 경로는 계층 간 격차가 적고 사회적 혁신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A경로)로의 이행임

□ 사회정책의 확장을 통해 높은 포용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사회정책을 발전시켜야 함


국가별 사회지출비중과 지니계수의 분포(2015)
35.0
30.0
25.0
20.0
15.0
10.0
5.0
사회지출 GDP 비중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
이태리
그리스
남부유럽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영미형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A경로
B경로
터키
칠레
멕시코
지니계수
0.200
0.250
0.300
0.350
0.400
0.450
0.500


높은 혁신성
2
1
포용
혁신
포용
혁신
낮은 포용성
높은 포용성
포용
혁신
포용
혁신
3
4
낮은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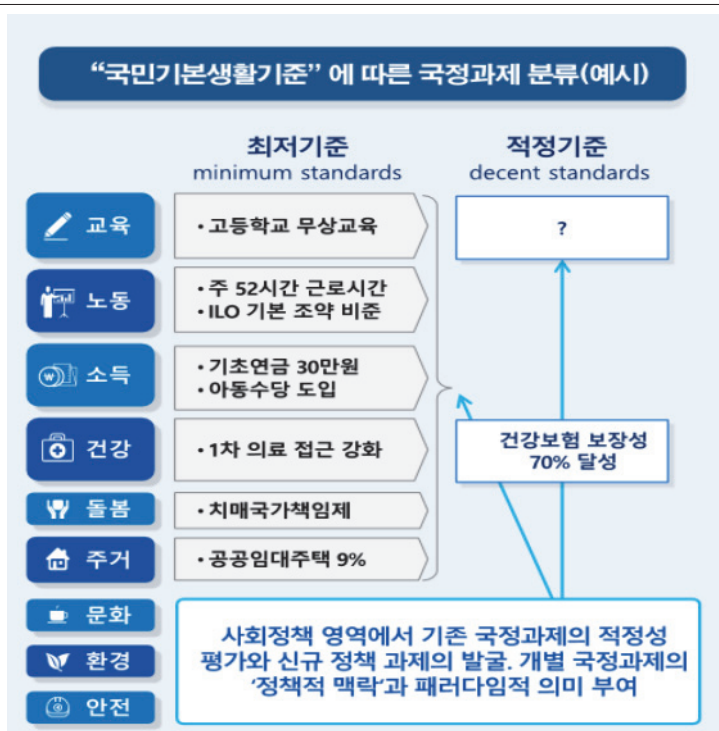
□ 사회정책 비전의 구체화 :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국민기본생활기준' National Living Standards :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의 기본적 수준에 관한 정부의 정책 목표와 정책 가이드라인

○ '국민기본생활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수준에 걸맞는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국가의 복장 책임)과 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적정기준'(국가, 개인, 공동체의 협력) 두 가지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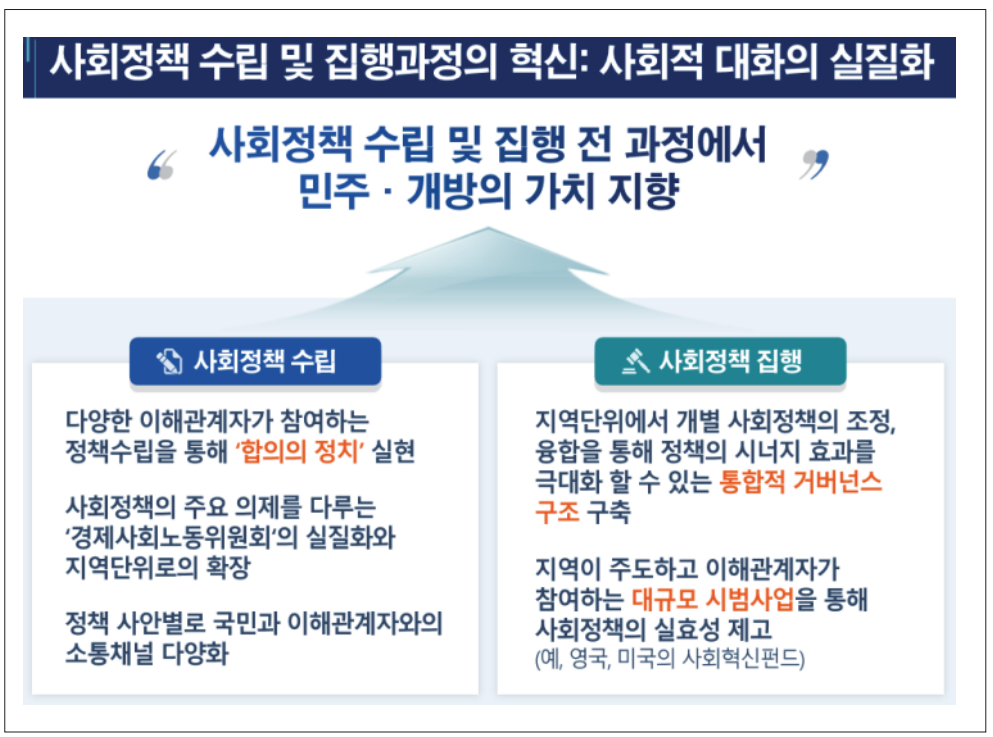
- 추상적인 사회정책비전과 전략을 각 부처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시적인 목표 제시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사회정책 분야 과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신규 과제 발굴 또한 사회정책 영역별 발전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여 뒤쳐진 정책의 견인과 선도정책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함



□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혁신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전 과정에서 민주와 개방의 가치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임



참고문헌

□ 사회지출 및 공교육비 지출 국제 비교

OECD(2014), “Social Expenditure Update : Social spending is falling in some countries, but in many others it remains at historically high levels”(주요국 연도별 사회지출비율)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15년 사회지출비 비중)

OECD, Online Education Database(Educational finance indicators)(공교육비 지출)

□ 경제 사회 지속 가능성

IMF(2018), Republic of korea : Selected Issues(IMF Country Report No. 18-41)(잠재성장률)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고령자 비율)

고용노동부(2017),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비정규직 시간당 임금비율)

OECD, Environment statistics(초미세먼지)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성평등의식)

□ 가계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 제도의 2016년 통계연보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2017),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2018), ‘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보험개발원(2018), 보험통계 : 종목별 수입보험료 명세표현황(KOSIS 수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보건복지부(2017), 2016년 기준 국민보건계정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2018),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보도자료)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교육부·교육개발원(역), OECD 교육지표 2017

통계청(2018),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보도자료)

□ 노동시장 불평등

홍민기(2017), “보정 지니계수”,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3호(시장소득 보정 지니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OECD, OECD Dataset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지니계수 완화 효과)

□ 경제지표와 사회지표

OECD, OECD.Stat(Finance_insurance Statistics_Insurance Indicators) (생명보험료 지출 순위)

IMF, IMF Data Mapper(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8)-Gross Domestic Product)(GDP순위)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성평등 순위)

□ 물리적 조건과 삶의 질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 사회정책 국제 동향

IMF(2017), Fostering Inclusive Growth : Staff note for the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G20

World Bank(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OECD(2014), All on Board :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ILO(2012), Wage-led growth :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EC(2013), Social investment package : Towards Social Investment for Growth and Cohesion

UNRISD(2016), Policy Innovations for Transformative Change

□ 인구규모와 경제개방도

World Bank(201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ni RodriK(1998),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5

□ 소득보장제도 개혁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2002), 개인연금 운용 현황(개인연금 유지율)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연금저축 유지율)

□ 사회보험 가입률 및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OECD(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국민연금 보장성)

OECD(2015), Tax-Benefit Models(실업급여 보장성)

OECD(2018), OECD Economic Surveys : Korea(기초연금 보장성)

□ 기초보장과 사회보험 강화

국민연금연구원(2018a),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국민연금공단(2018), 2017년 12월말 국민연금 공표통계(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분포,10년 이상 가입자)

□ 공평한 기회와 권한

OECD(2018), OECD Economic Surveys : Korea(성별 임금격차)

고용노동부(2017), 고용노동통계(기업 규모별 월평균 임금)

고용노동부(2017), 2016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기업 규모별 노조 조직률)

OECD, OECD Dataset : Employment_Female share of seats on boards of the largest publicly listed companies(젠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중_기업임원)

OECD, OECD Dataset : Women in politics

OECD, OECD Dataset : Decile rations of gross earning incidence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젠더 : 여성 중 저임금근로자)

통계청(2016), 가계동향조사(교육 :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통계청(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주거 :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재수)

□ 대학정원 및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역간 격차

국토교통부(2018.3.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6년 쇠퇴지역 현황)

차미숙 외(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정책Brief. No.525.(2040년 인구증감 예측)

KHEI(대학교육연구소)(2018.06.05.), “정원감축 주 타깃은 ‘지방대, 전문대, 중규모대’, 1주기 구조조정기간 정원감축, 쏠림현상 뚜렷(보도자료)”, (대학 정원 감소 지역간 격차)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국공립보육시설비율)

□ 저출산·고령사회

United Nation(2017), 2016 United Nation Demographic Yearbook(출생아 수)

통계청(2017),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2017년 한국 출생아 수)

통계청(2016.12.8.),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출생아 수 추계치 및 노인인구비율 장기전망(중위가정))

European Commission(2018), The 2018 Ageing Report(노인인구비율, EU 28개국)

□ 사회지출 장기전망

사회보장위원회(2018), 사회보장위원회 내부자료(사회지출 장기 추계, 국민연금 제외)

국민연금연구원(2018b),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국민연금지출의 GDP 대비율)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공적연금 지출규모

OECD, OECD Health Statistics(연평균 의료비 증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중)

OECD(2015), "The future of health and long-term care spending"(2060년 한국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

European Commission(2016), The 2018 Ageing Report(2060년 EU 28개국 연금 지출 평균)

□ 사회서비스 일자리

조동희(2018),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및 시사점, KIEP(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교육·보건복지 취업자 수)

노동부(2017),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취업자 증가 예상 상위 5대 업종)

함선유·권현지(2017),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산업노동연구』 23권 3호(2016년 기준, 돌봄 분야 근로실태비교)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사회보장위원회(2018),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2017년 기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중 국공립비중)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6), 2016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2014년 기준, 공공병원 병상 수 비중)

Housing Europe(2017),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및 OECD Database, 각국 통계청(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보육서비스 만족도)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사례(보육서비스 만족도)

□ 공공보건·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비용절감 효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8),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내부자료(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육아정책연구소(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보육·교육비 월평균 가계 추가 부담 비용)

□ 안전보장과 생명존중

OECD(2015), Green Growth Indicators Database(미세먼지 노출 비율)
여성신문(2018.5.19.), 1만여 여성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2018 혜화역 여성집회)
소방방재청·서울대학교병원(2007), 국가안전관리전략개발(2006년 한국사회사고 총량)

□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OECD(2012),m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Problem Solving Assessment(초중등 교육의 창의성·다양성 부족)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각 연도)(대학교육 : IMD대학경쟁력 순위)

□ 인적역량 강화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Eurostat Database, Par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by age(평생학습 참여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소득계층별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 일터혁신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주요국 일터 과업 재량 정도 비교)
OECd,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PIAAC) 2012(일터의 직무만족도 국제비교)
The Economist(2018), The Glass-Ceiling Index(여성의 유리천장지수 국제비교)

□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노동부(2018),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상위 5대 직업군)

노동연구원(2016),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경남7개 조선소 인력 구조조정 현황)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실직 후 빈곤률)

OECD.Stat;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20년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자대비 실업관련 급여 수혜율)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통계청(2017.1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